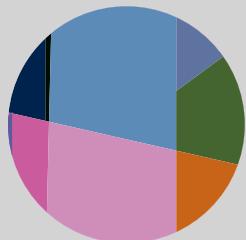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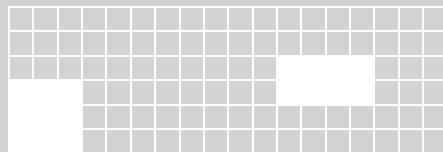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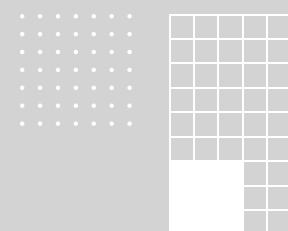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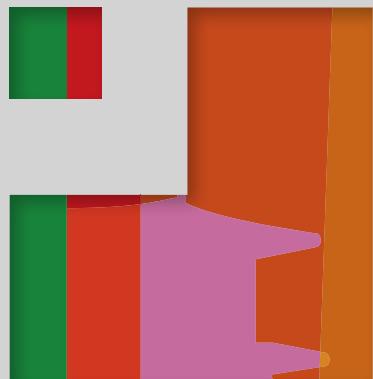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44 - Winter 2021



건축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일자리형산업이다.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으로 그 영향력과 가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으로서 건축이 가지는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건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44
Winter 2021

발행

2021년 12월 31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이영범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편집책임

고효진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정책이슈 기획

임철호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편집

이미영, 김민자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넓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디했습니다. 일부 책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리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43, 8층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ISSN

2288-2332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건축산업의 가치와 발전을 고민하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채로운 일상의 무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나 질 높은 건축, 풍요로운 도시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발전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

시론: 왜 건축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박인식	016
건축의 산업적 가치 재발견	김은희	024
산업으로서 건축의 잠재력과 발전 과제	이동희	033
소규모 건축시장의 혁신과 산업화의 필요성	이양재	040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	염철호	049

통계자료실

국민들은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은석	058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일본의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물 진흥 정책 강화	권용수	064
국내동향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조관우	070
해외단신	파리의 '포장된 개선문' 설치와 시사점 외	유무종	076
국내단신	국토교통부,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외		084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장소 만들기를 위한 플랫폼, Architecture & Design Scotland	임정하	088
--	-----	-----

장소탐방

기억 위에 새 동심을 채우다 – 맘껏숲 & 하우스	김아연·김현민·김현·최정인	096
권위의 장벽을 내리고 소통의장을 세우다 – 헌법재판소 별관	김복지	112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26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129
2021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건축공간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130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을 스마트하게, ‘스마트건축’” 개최	130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학회 제2차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131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131
2021 한옥포럼 개최	132
2021 제4회 건축공간연구원-근대도시건축연구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132
2021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개최	13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제1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133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개최	134
2021 AURI 아카데미 성과보고회 개최	134
2021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135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136
더 나은 거주가치를 위한 주거문화 정책 세미나 개최	137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137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138
2021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프로그램 실시	139

특별기획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을 위해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신임원장 인터뷰

이영범 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AA스쿨(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에서
주택 및 도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경기도 건축디자인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 10월 5일 건축공간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변화, 안전사회 요구와 같은 미래 변화와 이에 따른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면밀하게 예측하고 전문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책 기획,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지원, 정책의 확산, 삶터의 질적 환경 개선, 모니터링과 제도의 재(再)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연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적용함으로써 체감 가능한 삶터의 변화,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범 제6대 원장은 연구원 승격 1주년을 맞은 건축공간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수행하는 정책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앞에 산재한 건축·도시 분야의 시대적 과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범 원장이 그리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짧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사람 중심의 건축,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신임원장 인터뷰

1 지난 10월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의 6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uri는 건축 및 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 이래 건축도시 관련 국가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본계획 정비 등 살기 좋은 건축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여러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auri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연구심의위원과 연구자문위원으로서 auri의 연구과제 평가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auri 구성원들과 협력해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하며 건축의 사회적 역할,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정책제언도 함께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auri의 역할과 소임 그리고 과제를 미리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건축, 더 나은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auri의 비전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우리 시대에 건축·도시공간이 직면한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에 집중하며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건축, 더 나은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auri의 비전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우리 시대에 건축·도시공간이 직면한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에 집중하며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2 취임사를 통해서도 ‘미래사회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auri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위기·인구감소·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잘 조성된 건축과 도시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auri가 건축·도시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선도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가속화, 중소도시 쇠퇴와 빈집 증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인구·사회 분야의 주요한 변화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가속화, 친환경 기술과 빅데이터 전면 등장 등 기술·산업 관련 변화 ▲미세먼지뿐 아니라 감염병 같은 재해의 증가와 기후변화·환경오염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의 부각 등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미래사회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 분야별 정책연구를 수행하되,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개별 연구의 가치가 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활용가치 통합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 변화에 따른 공간 대응과 관련된 범부처 간 융복합형 국정과제와 협력적인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때 다자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연구원의 정책연구 방향과 내용을 통합해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auri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축·도시정책 제언을 내놓는 핵심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연구모임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고, 관련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앞으로 auri의 연구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uri는 도시재생 관련 법령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 마련과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간 진행하고 지원해 왔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지방소멸 위기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도시 전체를 재생의 단위로 보고, ‘축소도시’ 개념에 기반하여 재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소 단위의 현장형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auri 마을재생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IT(Do It Together)형 현장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주체와 함께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현장기반형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대도시 집중화나 지방중소도시 쇠퇴와도 맞닿은 이슈로, ‘삶의 질’과 ‘살기 좋은 도시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aur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지방도시의 환경 질 제고의 문제, 주거 문제 등은 건축·도시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auri가 공간복지 실현에 목표를 두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공공간 활성화와 지역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공공공간, 즉 보행로·자전거도로·공원 등의 가치를 알리고 이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해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주인인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 auri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거공간의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서 토지임대부에 기반한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정책·제도 연구도 필요합니다. 지역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청년의 삶터 또는 일터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자체 단위의 ‘빈집자산화은행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와 지원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5 취임식에서 auri 임직원에게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돼 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와 일에 지쳐 더 이상 그것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와 성과로 이어지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아 하는 연구와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맺어낸 노력의 결실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충분히 가치를 발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당부를 했습니다. 또 ‘권력자로서의 원장’이 아닌,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소통하는 ‘파트너로서의 원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수요 증가로 연구자 1인당 수행과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품질 관리에 힘쓰고, 이를 통해 직원 복지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품질 관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협의체를 구성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협의 체를 구성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올해 11월로 auri가 연구원으로 승격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aur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연구를 독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겁니다. 기존보다 종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더불어 연구원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연구관리와 경영체계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 지향적 정책연구,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강조했지만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변화, 안전사회 요구와 같은 미래 변화와 이에 따른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면밀하게 예측하고 전문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정책 기획,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지원, 정책의 확산, 삶터의 질적 환경 개선, 모니터링과 제도의 재(再)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연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적용해야 ‘체감 가능한 삶터의 변화’와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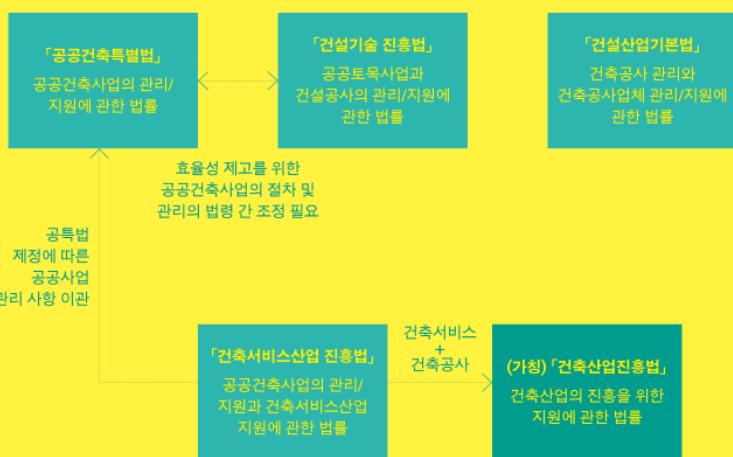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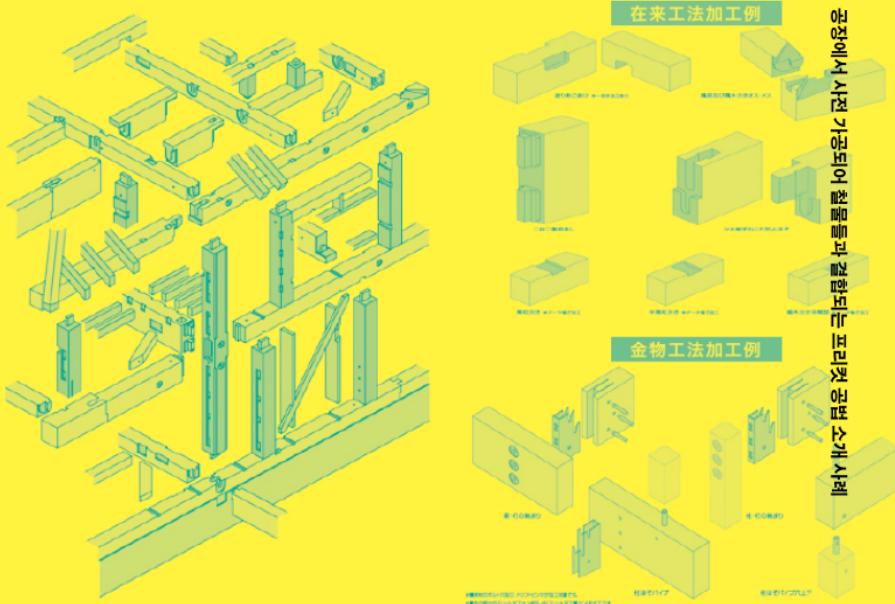
auri 내부의 협력, 통합연구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일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5개 연구단과 12개 센터로 운영 중인 연구원의 체계 안에서, 개별 연구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연구단과 센터 간 협력연구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장소 단위의 가치 통합형 연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또 공간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건축공간법제연구 센터’의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연구단의 공통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auri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이터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시대, 건축산업의 가치와 과제

1

그간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는 토목사업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건축은 토목에 비해 대부분의 사업이 소규모 민간사업이다 보니 제도나 정책의 대상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며, 소규모 건축시장은 건축물의 낮은 품질, 저가 가격입찰, 부실공사 등으로 제대로 된 시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다 일자리형산업이며 생활밀착형산업인 건축을 국가의 중요한 산업진흥 정책의 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산업으로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펴보고 건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건축의 산업적
가치 재발견
024

산업으로서
건축의 잠재력과
발전 과제
033

소규모 건축시장의
혁신과 산업화의
필요성
040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
049

왜 건축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 건축은 건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산업인 동시에 골목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추이자 국민들 매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산업이다. 이토록 중차대한 건축을 생산의 97%가 그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법·제도가 불비한 채 그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과 행정조직이 태부족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건축의 산업적 가치 재발견 | 건축산업이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며,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생산·이용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거나 새롭게 창출된다.

산업으로서 건축의 잠재력과 발전 과제 | 설계-시공의 업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지금의 건축 관련 국내 법 제도 및 산업구조는 융합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건축산업의 범위를 보다 광의적으로 바라보고 산업 내 가치사슬 전 단계를 모두 이우를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소규모 건축시장의 혁신과 산업화의 필요성 | 소규모 건축물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도 높은 시장으로 성장시키려면 산업화와 상품화에 대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사업자를 넘어서 전문주택건설회사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 | 이제 우리가 건축서비스 산업을 넘어서 건축산업의 진흥을 논의하는 데 있어, 먼저 필요한 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은 물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왜 건축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과 산업

우리 사회에서 ‘건물을 짓는 일’은 어려운 제약 조건, 즉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나 극복해야 할 조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이나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으레 만만치 않은 예산을 놓고 고민하기 마련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임대주택과 더 많은 문화·체육시설들이 필요하고, 질적 수준까지를 고려한다면 좋은 설계와 좋은 시공을 통한 좋은 건축이 필요하다는데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건축을 문화예술로 치켜세우곤 하는 정치인들의 의례적 발언에도 이런 이유가 얼마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끔’ 건축되는 ‘좋은 건축물’들이 문화예술 작품으로 다루어진다. 우리 도시와 동네를 채우고 있는 보통의 건축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 이 모두를 좋은 설계와 좋은 시공으로 생산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드는 일일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생산물이라면 그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력 또한 클 것 아닌가? 그 생산활동의 질적 수준에 따라 그것이 파급하는 영향력에도 큰 차이가 날 것 아닌가? 그렇다면 건축 생산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을 ‘어려운 제약 조건’으로 토로하고만 있기보다는, 그 생산활동 자체의 양적·질적 수준과 그것이 갖는 경제적·산업적 영향력을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건축생산의 총량은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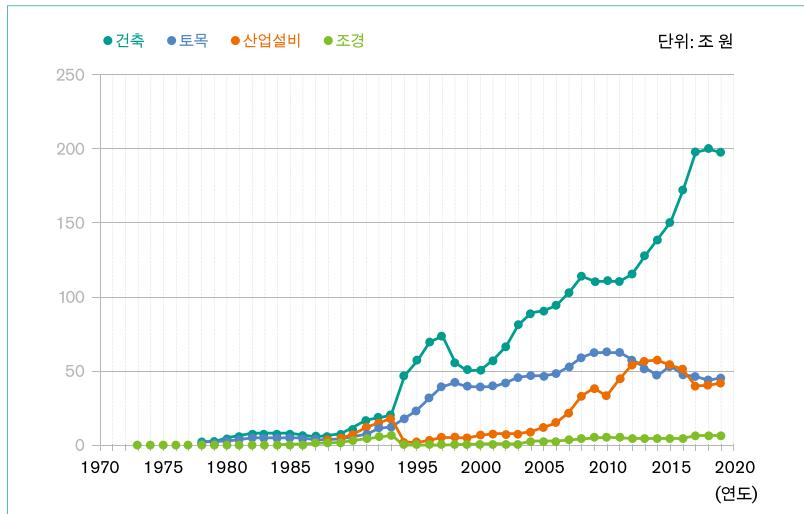
되고 그것에 투입되는 금액과 인력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큰지, 건축의 생산과 소비 주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생산-소비하는 건축의 유형별 양과 질은 어떠한지, 이들 건축의 설계·시공을 비롯한 생산활동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어떤 질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과 그래서 어떤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의 질적 수준을 얼마만큼 높이면 총 투입 금액이나 인력 소요는 얼마나 늘어나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생산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건축은 막대한 예산, 즉 막대한 재화와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라는 것은 곧 건축이 중요한 산업 활동임을 의미하고, 이는 곧 그것이 갖는 산업적 영향력과 정책 효과 또한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돼야 마땅함을 뜻하는 것이니 말이다.

산업규모의 진실: 건축산업이 건설산업의 주인공이 된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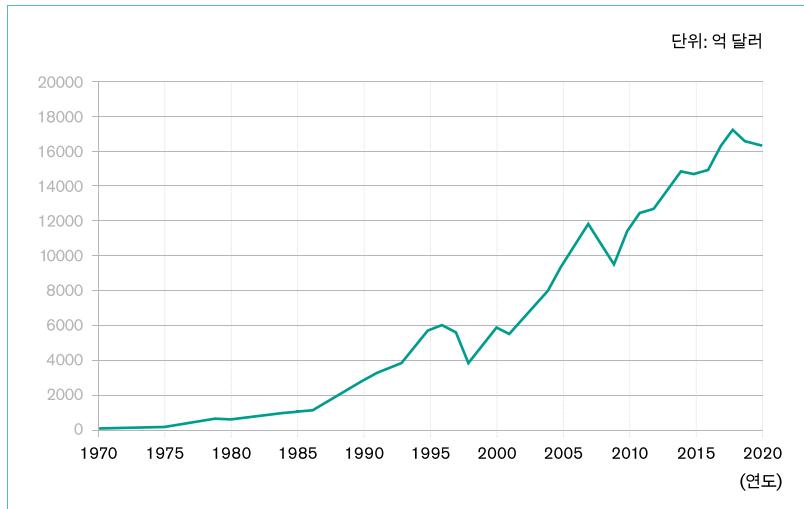
한국은 오래전부터 ‘토건국가’라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별명이 붙은 나라다. 1970년대부터 국민총생산(GDP) 중 건설투자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1990년대 초에는 30%에 육박할 만큼 토목-건축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14% 내외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 국가들의 평균 수준 1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설산업을 공사 종류별로 건축-토목-산업설비-조경으로 구분하여 공사 기성액을 집계한 통계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의 다이내믹한 변화



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건축공사 총량이 크게 늘어나며 다른 부문들과의 격차를 계속 벌려 가고 있다. 2019년 건축공사 기성액은 198조 원으로 건설업 총 기성액 293조 원의 68%에 달한다. 토목공사 46조 원, 산업설비 43조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공사 기성액을 산업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건축은 건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업인 것이다.



건설업 기성액 추이
출처: 통계청, 건설업조사



한국 GDP 추이

건축산업의 성장 그래프는 우리나라 GDP 성장 그래프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즉 토목-산업설비 산업이 정체하며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 보이는 반면 건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동일한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생산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건축생산에 대한 수요 역시 동반해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건축산업 또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통계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인공은 단연 건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건축산업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이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건축공사 발주부터 공사관리까지 생산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기준은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짜여 있다. 건축직 공무원 임용 인원은 토목직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산업 규모는 건축이 4배가 넘는데, 이를 정책-제도-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수는 3분의 1이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 우리 사회의 건축 생산활동이 놓여 있는 것이다. 공공발주 토목공사 비중이 컸던 1970~1980년대에 만들어진 법-제도-행정 체제가 1990년대를 경계로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내수산업의 중핵: 건축산업의 주인공, 동네건축

건축산업과 토목산업을 동일한 법-제도로 관리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건축산업을 구성하는 건축생산의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건설 산업의 70%에 달하는 건축공사 기성액 198조 원은 어떤 건축물의 공사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다음 페이지의 표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간 건축물 착공 통계를 건축물 규모별로 집계한 것이다. 매년 건축되는 건축물 동수 기준으로 97.6%가 연면적 5,000m² 이하 중소규모 건축물들이다. 우리 동네 골목골목에 들어서 있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이들 중소규모 건축물들은 면적 기준으로도 총 건축공사 면적의 46.6%로 절반에 육박한다. 건설산업의 70%에 달하는 건축산업의 주인공은 '동네건축'인 것이다.

건축물 착공 통계

구분	건축물 규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비율		
동수	소규모	200m ² 미만	115,221	121,796	136,712	142,051	131,524	129,461	62.0%	92.6%
		200~660m ²	48,652	54,040	60,640	61,524	52,546	55,480	26.6%	
		660~1,000m ²	7,026	7,382	9,339	9,476	8,282	8,301	4.0%	
	중규모	1,000~3,000m ²	7,661	7,253	8,963	9,150	8,982	8,402	4.0%	5.0%
		3,000~5,000m ²	1,671	1,902	2,363	2,230	2,035	2,040	1.0%	
	대규모	5,000~10,000m ²	2,128	2,654	3,613	2,973	2,570	2,788	1.3%	2.4%
		10,000m ² 이상	1,502	1,766	2,924	2,699	2,314	2,241	1.1%	
	계		183,861	196,793	224,554	230,103	208,253	208,713	100%	100%
연면적 (m ²)	소규모	200m ² 미만	9,236,743	9,924,512	11,126,477	11,948,931	10,889,256	10,625,184	8.0%	29.8%
		200~660m ²	19,488,109	21,523,775	24,749,850	24,668,997	20,715,083	22,229,163	16.7%	
		660~1,000m ²	5,811,538	6,101,741	7,697,734	7,819,505	6,825,853	6,851,274	5.1%	
	중규모	1,000~3,000m ²	12,948,940	12,348,861	15,418,044	15,707,546	15,203,498	14,325,378	10.7%	16.8%
		3,000~5,000m ²	6,574,875	7,511,207	9,351,754	8,834,945	8,027,599	8,060,076	6.0%	
	대규모	5,000~10,000m ²	15,406,639	19,170,623	26,578,380	21,869,945	18,943,415	20,393,800	15.3%	53.5%
		10,000m ² 이상	32,876,260	36,852,822	78,188,616	55,943,092	50,930,556	50,958,269	38.2%	
	계		102,343,103	113,433,541	173,110,855	146,792,961	131,535,260	133,443,144	100%	100%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축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시행령 제67조). 공공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당 법률이 규정하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억 원이면 대략 연면적 5,000m² 내외의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매년 건축되는 건축물의 97.6%가 연면적 5,000m² 미만이다. 결국 건축공사의 경우 전체 건축물 중 97.6%는 이 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3%도 채 안 되는 건축물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이런 ‘이상한’ 상황은 왜 생기는 것일까? 답은 이 법에서 가리키는 ‘건설공사’는 건축공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도로·터널·철도·교량·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 정확한 조문은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다.

건축산업은 건설산업의 70%에 달하는 산업 규모를 가지는 한편 그 대부분이 중소규모 건축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즉 ‘다량의 소규모 생산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이다. 생산 단위가 소규모이므로 당연히 그 생산주체도 소규모 업체들이다. 소규모 설계사무소와 소규모 건축시공업체들이 그 주인공이다. 전국 지역마다 골목마다 수많은 작은 일자리들을 일구는 경제활동 주체들이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들의 생산활동을 모두 더한 총량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의 태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그 애말로 우리나라 골목경제와 지역 일자의 중추, 내수경제의 중핵이라 할 만한 산업인 것이다.

건축산업의 주인공이 중소규모 동네건축이라는 사실은 건축산업이 동네의 삶, 즉 국민들 매일의 삶의 공간에 직결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축산업의 질적 수준이 국민들 매일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 는 얘기다. 그야말로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인 것이다.

건설산업정책으로는 건축산업을 다룰 수 없다

종합한다면, 건축은 건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산업인 동시에 골목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추이자 국민들 매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산업이다. 이토록 중차대한 건축물 생산의 97%가 그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법-제도가 불비한 채 그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과 행정조직이 태부족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건설산업정책은 있으나 건축산업정책은 그 존재조차 불투명하다. 건축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표준산업 분류에서도 건설업은 건축-토목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전문직별공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건물건설업과 토목건설업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건물건설업을 추려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건물건설업 이외에 자재산업 등 건축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들을 뚫어내는 일은 아예 엄두도 내기 힘들다. 건축산업 통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곧 건축산업을 국가 산업정책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건축공사 업계는 몇몇 대규모 건설업체와 수많은 영세 건설업체들로 양극화된 지 오래다. 대규모 건설공사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법-제

도가 그 원인의 일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건축산업의 주인공, 중소규모 건축생산 현실은 우울하다. 건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중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염연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뾰족한 것이 없다.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가 전부다. 건축공사나 공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차 분명치 않은 상태이니 정책적 수단 역시 분명치 않은 것이다. 중소규모 건축시장에 견실한 설계-시공업체를 육성하려는 정책도 없고, 이들을 살피기에 필요 한 행정조직도 없다. 중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종합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가 횡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그 구체적 실상이 파악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저 방치돼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정책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은 여전히 건축-토목을 ‘건설산업’으로 뭉뚱그려 다루고 있다. 기본계획은 “건설산업은 국내 시장의 성장이 어려운 성숙산업”이라는 현황 진단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부터 이상하다. 앞서 건설산업의 공사 유형별로 공사 기성액을 살펴보았을 때도 성장이 정체돼 있는 것은 공공발주공사가 주류인 토목산업이다. 건축산업은 한국 경제성장 곡선과 동일하게 계속 팽창하고 있다. 산업의 내용이나 속성이 전혀 다른 건축-토목을 구분하지 않으니 문제 진단이나 처방이 정확 할 리 없다. ‘기술력 중심으로의 발주제도 개편’이나 ‘중소 건설기업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해외진출 비용 지원’,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 역시 공공발주 공사업계를 대상으로 한 내용들이다. 건축산업의 주인공인 민간 소규모 건축공사를 업역으로 하는 수많은 영세 건축시공업체 들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해외시장 진출 역량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 역시 민간 소규모 건축시장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건축산업정책이 시급하다

대규모 공공발주공사를 주류로 하는 토목산업과 민간 중소규모 건축물을 주류로 하는 건축산업은 애초부터 전혀 다른 문제 진단과 정책과제가 필요한 전혀 다른 산업 분야다. 건축산업을 건설산업 정책에 뭉뚱그려 다루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토목이나 산업설비 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토목·산업설비 공사를 이질적인 건축공사와 끊뚱그려서 초점을 흐리지 말고, 토목·산업설비 공사업계에 맞춰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건축산업에는 그 내용과 속성에 걸맞은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건축산업을 정책 단위로 삼는 산업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각종 산업통계에서 건축산업이 명확하게 분류되고 그룹화될 수 있도록 표준산업 분류를 정비하는 일도 당면과제다. 건축공사의 특성에 맞춘 정책과 제도 정비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공사는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CM) 등 공사과정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역시 건축공사의 작업방식에 적합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치 상태인 중소규모 건축시장과 중소규모 설계-시공 주체들이 중요한 국가 정책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의 매일매일 삶의 질이 달려 있고, 골목경제와 수많은 일자리가 달려 있는 이 중차대한 분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소규모 건축 생산활동 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책을 고민하며 논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이 많은 일을 수행할 행정조직·인력을 확보하는 일부터가 국가적 과제다.

건축의 산업적 가치 재발견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건축산업에 관한 그간의 인식

많은 건축인들에게 건축의 우선 가치를 묻는다면 ‘공공성’을 들 것이다. 개별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의 터전과 장소’, ‘지역사회와 문화공간’을 구축하는 활동으로서 건축의 확장된 의의를 먼저 논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이란 빛 아래에 모여든...희극이다 (르 코르뷔지에, 2020)’, 프랭크 게리의 ‘나는 예술과 건축의 원천은 같다고 생각한다(이일형, 2004)’ 등 유명 건축가의 비유와 해석처럼 건축가 개인은 문학, 예술, 철학과 비견되는 관념적 창작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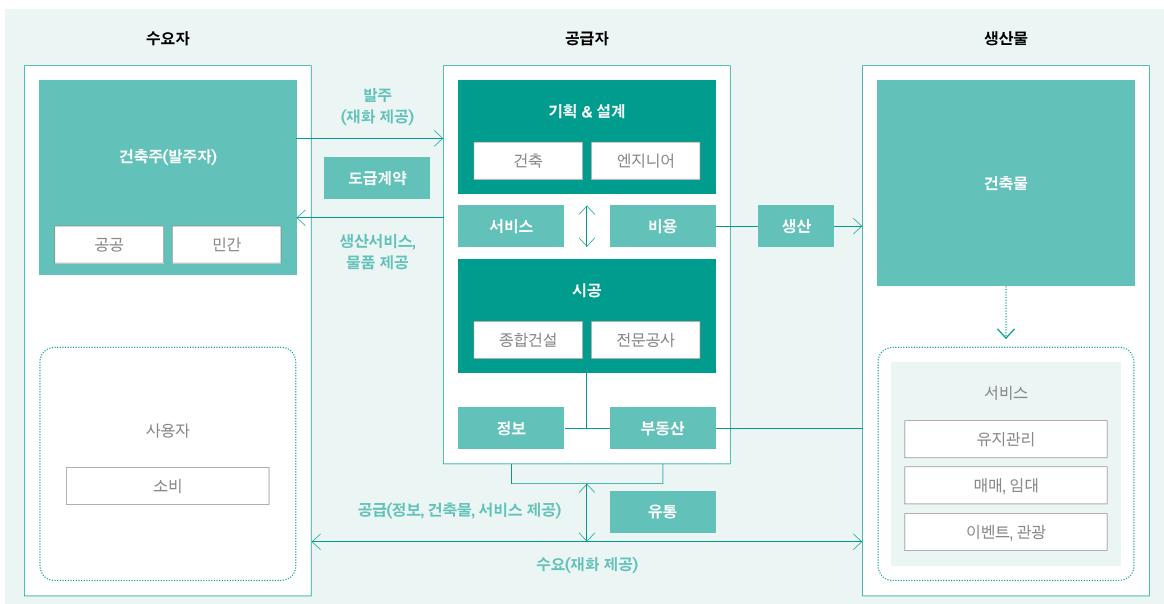
반면 건축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건축의 산업활동은 대체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집중되어 있었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가 ‘용역’의 형태로 엮여 있어, 일반적인 건축의 가치 범주로 산업을 떠 올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2014년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의 산업적 현안을 보편화하고 가치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본다.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2014.5.23.) 이전 법률

건축산업의 구조와 규모

아직까지 건축산업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위한 선행연구^{*}에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의 ‘건축’에 관한 용어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바탕으로 건축산업의 개념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1, p.18)’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서비스’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축공사’를 대상 범주로 정하였다. 이는 건축물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주체에 의한 건축사업과 생산물(건축물)의 수요와 공급 활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건축산업의 활동주체는 크게 건축사업 발주자와 건축물 공급자로 구분된다. 발주자는 건축사업을 기획하고 재화를 제공함으로서 건축시장의 거래를 발생시킨다.^{**} 공급자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획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와 생산물(건축물)을 제공한다.^{***} 「건설기



건축산업의 구조

출처: 김은희 외(2021, p.37)

* 김은희 외(2020),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21)

** 2018년 기준 발주 주체별 건축공사 수주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민간시장이 83%, 공공이 15%로 나타났다(이여경 외, 2020, p.15). 반면 건축서비스산업은 민간이 60.6%, 공공이 39.4%로 공공의 비중이 건축공사보다 높다(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2020).

*** 건축산업에 있어서 계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축사업 계약체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자격검증은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계약 등 협상기술은 건축사 자격부여를 위한 우선 요건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술 진흥법」에서는 공정과 공종에 따라 47개 분야 전문기술인을 규정하는데, 이는 곧 한 건의 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최대 47개 분야 공급자*가 관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산업의 구조적 복잡성을 말해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분야별 산업 통계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건축산업은 건설업 및 서비스업 통계를 참고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자료 **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축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8만 1,475개소, 153만 7,086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매출 또한 꾸준히 늘어나 2019년 361조 원을 넘겼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건축물 허가 및 착공 건수도 연간 각 27만 여건, 21만 건을 상회해 건축시장의 발주 및 수급 상황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산업규모의 확대나 시장거래 상황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도 영향을 미쳐 타 산업 대비 경쟁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 건축산업에서 분야 간 협업은 대체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이루어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는 건축설계·건축엔지니어링 간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업무 수행방식이다. 건축산업은 사업 발주 이후 설계부터 시공, 이용과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계약 체결과 전문기술인의 협업을 요하는 복잡한 절차와 산업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조사

*** 건축산업의 GDP(국내총생산)는 87조 원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 약 1,900조 원 중 4.5%에 해당함

****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허가 및 착공 건수는 감소

건축산업 사업체 수 추이(2016~2019)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축공사	53,527	56,924	61,018	63,877
건축서비스	14,934	15,260	16,800	17,598
합계	68,461	72,184	77,818	81,475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21, p.28)

건축산업 총 종사자 수 추이(2016~2019)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축공사	1,213,772	1,368,305	1,429,243	1,402,281
건축서비스	119,566	124,022	133,359	134,805
합계	1,333,338	1,492,327	1,562,602	1,537,086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21, p.30)

건축산업 매출액 추이(2016~2019)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축공사	277,033,737	341,357,180	353,928,596	344,984,581
건축서비스	14,274,771	15,244,859	16,445,426	16,273,992
합계	291,308,508	356,602,039	370,374,022	361,258,573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21, p.34)

건축물 허가 및 착공 현황 추이(2016~2020)

(단위: 동)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축물 허가	275,572	263,683	270,811	237,034	223,390
건축물 착공*	231,972	208,935	216,102	194,947	185,640

* 주: 건축물 착공은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을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2016년 ~ 2020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264&conn_path=l2; 연도별 건축물 착공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260&conn_path=l2

구분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설업	10.03	10.13	8.93	8.49	8.47	0.72	0.77	0.82	0.81	0.81	
전문, 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12.91	10.36	10.17	9.7	9.24	0.83	0.84	0.87	0.86	0.86	
타 산업	제조업	5.32	5.76	5.36	4.92	4.68	0.56	0.62	0.66	0.65	0.64
	통신업	9.1	6.92	6.02	5.91	5.77	0.81	0.86	0.88	0.86	0.85
	정보업	7.85	7.57	6.89	6.09	5.89	0.78	0.86	0.87	0.86	0.84

* 주: ISTANS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산업을 분류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

출처: ISTANS, 고용유발계수(산업별)(2014년~2018년), <https://istans.or.kr/su/newSuTab.do?scode=S311>; ISTANS, 부가가치유발계수(2014년~2018년), <https://istans.or.kr/su/newSuTab.do?scode=S313>

건축산업의 사회적 영향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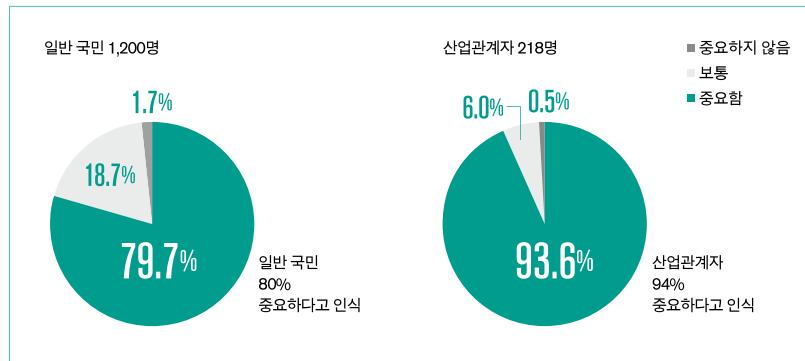
「건축법」, 「건축기본법」은 ‘건축’을 매개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고 문화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전한 삶 영위’와 ‘공공복리 증진’ 추구를 법률 운영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산업에 관한 대표 법령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명시한다.

-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디자·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증명하듯, 건축이 국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면, 직접적인 건축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건축’을 삶 속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축물을 아우르는 ‘공간인프라^{*}에 대한 산업투자의 중요도’ 조사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58%)’을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43%)’, ‘지역 균형 발전(41%)’, ‘국가와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39.5%)’로서 건축산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석인 외, 2020, p.6).

즉, 건축산업이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며,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건축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생산·이용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거나 새롭게 창출된다. 설계와 시공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건축자재 및 장비의 제조와 유지관리, 건축물 매매와 임대, 유지관리, 관광 등 다양하며 이들 전후방 산업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건축산업의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배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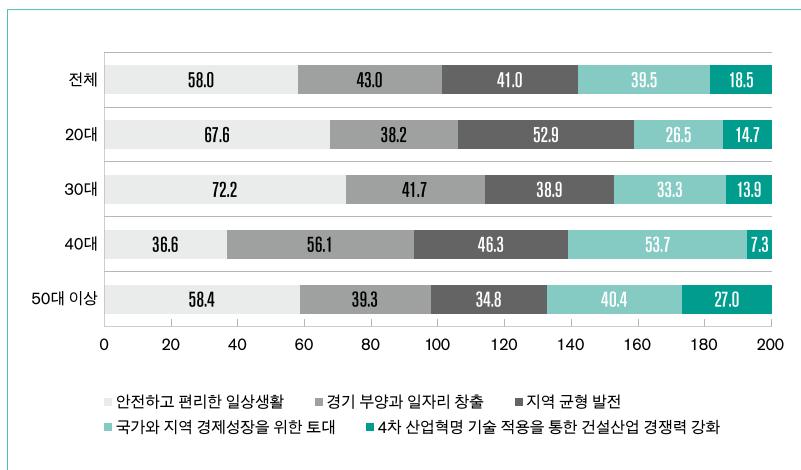
국민들과 산업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건축’의 중요성



출처: 이여경 외(2020, p.81)

* 해당 조사의 ‘인프라’에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산업단지, 항만과 더불어 체육 문화시설 등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음

건설산업 인프라 투자의 의미와 중요성



출처: 최석인 외(2020, p.6)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 ① OECD 국가 중 사업체 규모에 비해 낮은 매출액
- ②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
- ③ 대기업에 편중된 매출실적과 민간사업 및 수의계약의 높은 비중
- ④ 기술인력 부족과 해외시장 진출 의지 미흡

건설산업에 대한 문제 인식

- ① (낙후된 기술) IoT(건설 9.1, 전산업 평균 11.9), 빅데이터(건설 4.5, 평균 14.1) 등 활용 부진
(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도 조사, 2018.1.)
- ② (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한 기업) 건설근로자의 85.4%가 건설사가 아닌 팀 반장을 통해 시공에 참여(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 2017.4.)
- ③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국민의 80.2%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2017.10.)
 - * 불공정 하도급 > 입찰담합 > 갑질관행 순으로 불공정의 원인을 지적
- ④ (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 건설 일자리의 직업만족도, 건설 관련 학과의 전공 선호도는 최하위권
 - * 건설일용직, 용접공, 미장공은 직업 만족도 최하위 직업(직업능력개발원, 2014), 이공계 전공 인기도 분석 결과, 건축 토목학과가 최하위권(동아일보, 2016.3.)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p.4)

한편 건축산업 수준은 공공적 가치구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의 요구와 가용 자원, 여건을 잘 고려한 설계와 시공은 경제적이면서도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로 불공정한 거래, 정확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은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 사용성,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도시의 질서나 미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건축산업 가치 확대를 위한 과제

건축산업 의의와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노동집약적 건축시장과 저가낙찰 및 계약방식은 노동력을 대체할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더디게 한다. 설계 및 공사 과정의 정확하지 못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건축생산과정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공사기간 중 잦은 설계변경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사기간의 지연, 사업비 상승,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과 건축의 다양한 가치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산업의 관점에서는 시장자율에 기반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건축의 복합적 가치구현의 결립돌이 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취약성은 공공의 개입을 통해 시정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급계약방식, 소규모 사업체가 대다수인* 건축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발주 및 계약, 기술인력 자격제도 등은 필수적으로 보완·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부각되는 환경문제, 기술혁명, 노동문제 등의 각종 이슈가 산업에만 국한된 민원성 현안이 아니라 국가경제, 국민의 삶,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등 사회공익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해당 논지에서 건축산업의 가치도 더 새롭게 재발견되어야 한다.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김은희, 2021).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2016~2020년)
- 2 관계부처 합동. (2018). 건설산업 혁신방안.
- 3 김은희, 이여경, 박태홍. (2020). 합리적 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4 김은희, 김상호, 조시은, 유제연, 오민정. (2021).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5 르 코르뷔지에. (2002). 건축을 향하여. 동녘.
- 6 이일형. (2004). 최초의 해체주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 살림.
- 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1).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 8 ISTANS. 고용유발계수(산업별)(2014-2018년)
- 9 ISTANS. 부가가치유발계수(2014-2018년)
- 10 이여경, 송혜진. (2020).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0. 건축공간연구원.
- 11 최석인, 이승우, 순태홍, 허윤경. (2020). 2030 건설산업의 미래와 수요 - 대국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2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2020). 2021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건축공간연구원.
- 13 Archithril. (2020). Architecture as Frozen Music. <https://archithril.com/architecture-as-frozen-music/>

산업으로서 건축의 잠재력과 발전 과제

이동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축산업이란 무엇인가?

건축산업이란 무엇인가?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건축(architecture)’과 ‘산업(industry)’이라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 먼저 ‘건축’에 대한 정의는 예술적 측면에서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하겠지만, 사전적으로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관점에서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음으로 ‘산업’은 건축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용어이지만, 좀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산업(產業)을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사전(Oxford Learner's Dictionaries)은 ‘industr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건축법」 제2조

*** 「건축기본법」 제3조

****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industry>(검색일: 2021.11.30.)

- ① the production of goods from raw materials, especially in factories(원료를 이용한 재화의 생산, 특히 공장에서)
- ② the people and activities involved in producing a particular thing, or in providing a particular service(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나 활동)
- ③ the quality of working hard(근면한 기질)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17)에서는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자본·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산업이란 어떤 유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축산업은 어떤 구조물 또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실제로 만드는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건축산업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

사실 KSIC 체계에서 건축산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제도적 관점에서 건축과 관련된 산업들이 존재할 뿐이다. 건축물 조성 관련 산업으로서 ‘건물 건설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유지관리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산업분석의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에서 건축산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건축물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활동으로서 건축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경계가 분명치 않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건축산업의 위상

단일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의 위상

산업으로서 건축의 잠재력은 그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국은행(2021)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투입산출

건축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2019년 기준)

단위: 십억 원, 천 명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자
협의의 건축산업 (전 산업 대비 비중)	324,120 (7.40%)	153,950 (8.10%)	1,737 (9.60%)
광의의 건축산업 (전 산업 대비 비중)	557,800 (12.80%)	258,380 (13.60%)	3,130 (17.30%)

출처: 2019년 투입산출표(한국은행, 2021)를 이용해 저자 분석

표를 바탕으로 도출한 건축산업의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자 현황을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건축산업의 범위를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와 시공으로 한정하는 협의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2019년 기준 총산출은 약 324조 원으로 전 산업 대비 7.4% 수준이며, 부가가치는 약 154조 원으로 전 산업 대비 8.1%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자는(임금근로자)는 약 173만 7,000명(전 산업 고용인원의 9.6%)으로 총산출이나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건축산업의 범위를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으로 확장하여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건축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 총산출과 부가가치는 각각 전 산업의 12.8%와 13.6%를 차지한다. 고용자는 전 산업 고용인원의 17.3%인 약 313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건축 관련 제조업 제외) 고용 규모(약 271만 3,000명)를 넘어설 만큼 크다.

타 산업의 연관 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의 위상

건축산업의 잠재력은 단일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관계적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건축산업

* '협의의 건축산업'에는 투입산출표 통합소분류 부문의 건설업(501-519)과 건축 관련 과학기술서비스업(721,729)이 해당한다고 보았다.

** '광의의 건축산업'에는 투입산출표 통합소분류 부문의 건설업(501-519), 건축 관련 과학기술서비스업(721,729), 건축 관련 광업(072), 건축 관련 제조업(261,263,269,301,361,391,440), 건축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491), 건축 관련 인력공급 및 임대업(730,742)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분석도구로 구체적인 방법론은 한국은행(2014)을 참고할 것.

구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 인원
협의의 건축산업	직접효과(A)	285,902	131,693
	간접효과(B)	239,036	90,545
	총 효과(A+B)	524,937	222,238
광의의 건축산업	직접효과(A)	406,192	184,368
	간접효과(B)	214,921	77,945
	총 효과 (A+B)	621,113	262,313

출처: 2019년 투입산출표(한국은행, 2021)를 이용해 저자 분석

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로 인하여 국내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2019년 기준 국내 건축산업의 최종수요는 협의적 수준에서 약 268조 원, 광의적 수준에서는 약 318조 원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협의적 건축산업 수준에서 보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축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285조 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31조 7,0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50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건축산업 이외의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즉 간접효과는 생산유발 약 239조 원, 부가가치유발 약 90조 5,000억 원, 고용유발 약 88만 8,000명이다. 건축산업을 광의적으로 정의할 경우 간접효과는 줄어들지만 직접효과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데, 그 결과 총 효과는 생산 약 621조 1,000억 원, 부가가치 약 262조 3,000억 원, 고용 약 286만 2,000명으로 협의적 차원의 총 효과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건축산업의 제도적 정의와 범위 명확화

앞서 보여준 분석결과에서처럼 단일산업으로서 그리고 타 분야의 연관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지만, 그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장 잠재력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산업 진흥과 지속 성장을 위해 건축산업의 법·제도적 범위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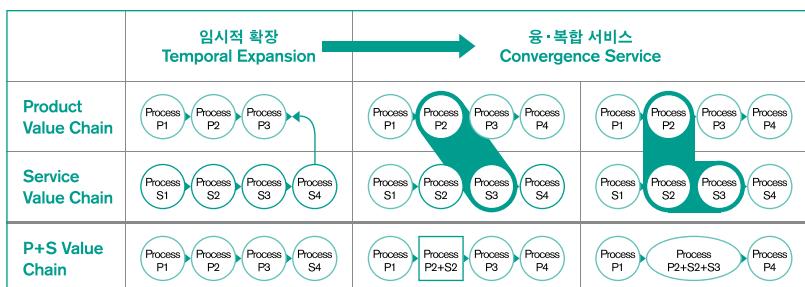
디까지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는 건축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산업 진통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생산물-기업-산업 간의 융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건축산업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획-설계-시공-유지보수 등으로 이어지는 건축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수평적 통합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 이외의 여타 산업의 가치사슬로 수직적 확장 및 영역 재구성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실제 이러한 융합적 사고는 정체에 빠졌던 전통 제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GM의 자동차 할부서비스(자동차+금융), 롤스로이스가 제공하는 24시간 항공기 엔진 감지서비스(항공기 엔진+정보통신) 등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사슬 융복합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융합을 촉진하는 건축산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설계-시공의 업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지금의 건축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산업구조는 융합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은 제조업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 산업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자동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사슬 화학적 결합을 통한 제품-서비스 융합



출처: 김지은(2014)

차제조, 개인운송, 로보택시, 금융·할부, 보험, 차량공유·유지보수·중고차 플랫폼 등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 하나의 거대한 융합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건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유사하다. 진단·치료 서비스를 넘어 뷰티, 휴식과 휴양(관광)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웰니스(Wellness) 산업으로 재정의되어 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산업의 범위를 보다 광의적으로 바라보고 산업 내 가치사를 전 단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건설, 건축설계의 범위에서 벗어나 금융보험업('부동산·건설 금융') '화재보험' '주택보증보험' '건설·주택 공제조합'), 도소매업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공공행정' 등으로 산업의 외연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건축산업 통계기반 구축

건축산업의 제도적 정의 및 범위와 함께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건축산업 통계기반의 구축이다. 건축산업을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수립이 필수적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통계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건축산업의 제도적 정의를 토대로 폭넓은 범위의 연관 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건축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건축산업의 정의와 핵심적인 건축사업을 법령에 규정하더라도 통계 작성은 보다 광의의 수준에서 작성하여 정책 수립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 또한 건축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별도로 구분되어 정의된 산업이 아니며, 여행·숙박·음식·운송·여가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복합산업이다. 이에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관련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관광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하였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을 넘어 보다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즉 관광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광사업(핵심산업), 관광객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상호의존 관광산업),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부분 적용 지원산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관광지원산업)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휴양업, 야영업, 유람선,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유홍음식점,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면세업 등)

참고문헌

- 1 김지은. (2014).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Servitization Business 전략. *ie매거진*, 21(2), 34-37.
- 2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 3 한국은행. (2021).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소규모 건축시장의 혁신과 산업화의 필요성

이양재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건설면허 적용범위 확대 취지 및 배경

2017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공사 기준이 확대되었다.*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건물들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법령에서는 $660m^2$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이처럼 개정안에서 $200m^2$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이유는 소규모 건축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660m^2$ 이하의 건축물 시장을 소규모 건축시장으로 일컫는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소형 상가나 다가구 등 주택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건물들이 해당된다. 이 규모의 건물들은 그동안 전문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시공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건축주를 포함한 비전문가들이 쉽게 참여하여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짓다 보니 전반적인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 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m^2$ 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661m^2$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약 90%를 차지하며, 이 중 83.6%가 개인 소유이고, 2017년 기준 전체 건축허가 건수 중 $50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허가 건수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서수정, 2019, p.2).

부실공사가 난무하여 포항 지진 때처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축주 직접 공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의무적인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이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200m² 이상 660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및 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들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지어짐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이 보다 개선되었다. 아울러 과거에는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거나 세수 누락 등이 빈번하였던 것에 비해 공사비 및 매출 상황과 세금 등이 데이터로 집계되고 합산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건축주 직접 공사 범위를 줄이고 전문건설업체들의 진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소규모 건축물 시장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200m² 이하의 건축시장에서는 여전히 전문건설업체가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2021년에도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암울한 현실

여전히 편법 시공이 자행되는 200m² 미만의 소규모 시장

연면적 200m² 미만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대표적인 건물 타입은 단독주택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어 대부분의 단독주택 공사는 여전히 건축주 직접 공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주가 시멘트와 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집을 완성하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시공주체를 건축주로 행정서류상 신고하고 실제로는 건설전문인력 등을 일괄화도급의 형태로서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전문가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 포항 지진 시 지상 1층 빌로티 기둥이 험없이 부러졌던 다가구주택들 또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다수였다. 이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상기의 법안이 개정되었다.

** 경제학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낮고 불량품이 난무하는 시장을 '레몬마켓'에 비유한다. 후분양이 아닌 이상, 계약 후 시간이 지나서야 시공 품질을 알 수 있다는 점, 향후에 건축물을 매매하더라도 하자 담보가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단독주택시장 역시 대표적인 레몬마켓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통용되는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단독주택 시장의 저신용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2017년 기준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 공사가 전체 허가 건수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정, 2019, p5).

아끼면서도 공사 전체를 일관로 맡길 수 있고, 전문인력 혹은 무자격자의 입장에서는 건축주 직접 공사로 행정서류에 신고됨에 따라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시공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보니 어느새 이러한 이면 계약 방식의 편법은 시장의 보편적인 방식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이렇게 서류상 시공자(건축주)와 실제 시공자(계약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하자 발생과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한 건축 분쟁 및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시장의 선진화 및 산업화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종합건설면허업체가 개별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합건설면허업체는 초고층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대다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가 늘어서 있는 대규모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가 아닌 이상, 인건비 대비 수익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별 소규모 건축물 현장은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종합건설면허업체가 소규모 건축물 시공을 수주하더라도 일정 수익을 떼고 제2의 업체에 일감을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자격자들도 영세한 탓에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가 어려워 면허 대여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면허업체가 시공하더라도 건축주 직접 공사처럼 행정서류상의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품질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 현장 제작 중심의 재래식 공법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첨단 전자제품과 자동차·선박을 만드는 하이테크(High-Tech) 제조업 강국이다. 그럼에도 소규모 건축물,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시장은 여전히 현장 제작 비중이 매우 높고 공장 제작 비중(Off-Site Construction: OSC)이 지극히 낮아 로테크(Low-Tech)에서 수십 년째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 건축물마다 벌어지는 현장 제작 위주의 시공 방식은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생산성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제작

* 국내 건설업의 생산성은 노동시간당 부가가치가 13달러로 선진국의 3분의 1, 타 산업 대비 60~70% 수준이다(국토교통부, 2017, p.3).

을 통한 대량생산 방식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단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서 더욱 수요를 촉진한다. 선진국의 단독주택 시장은 공장 제작 위주의 제조업 방식을 오래전부터 건설업에 도입하였다. 건물의 부재 및 부품들을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합하여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대의, 양질의 주택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국내 단독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일본 하우스메이커를 통해 바라본 소규모 건축시장의 개선 전략과 제언

단독주택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소규모 공무점*** 외에도 하우스 메이커****로 불리는 주택전문건설회사를 통해 집을 짓기도 한다. 하우스메이커는 집 짓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편의성이 강점이다.***** 부지 선택과 금융정보 제공 등을 비롯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하자보증까지 모두 처리해 주면서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주택시공 또한 공장 제작 방식의 비중을 높여 프리팹 및 패널화공법, 유닛공법, 프리컷공법 등을 활용하여 균일한 품질을 구현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마치 가전제품회사처럼 하우스메이커끼리도 경쟁하여 회사마다 독자적인 구조 방식과 재료 구별,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을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모델 하우스도 상시 운영 중이다. 일본의 소규모 공무점 방식과 흡사한 형태는 국내 시장에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로 완제품 형태의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수십 년의 보증제도를 실시하는 하우스메이커와 유사한 사례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Smart Construction 2025'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2025년 까지 BIM(빌딩 정보 모델링)과 AI(인공지능)를 적용한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 2017, p.16).

** 2020년 기준 일본 내 착공건설주택은 총 81만 5,340호였으며, 이 중 독립적인 단독주택(一建)은 39만 6,122호로 48%에 이른다(建築着工統計調査, <https://www-e-stat.go.jp>). 이 가운데 하우스메이커를 통해 짓는 비율은 대략 25%이며, 일반적으로 하우스메이커당 연간 4,000채에서 1만 3,000채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판매한다.

*** '공무점(工務店)'이란 지역에 밀착되어 설계·시공을 묶어서 일본식 목조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회사를 말한다. 과거 목수가 일식으로 의뢰받아 집을 짓던 방식이 현대화된 법인 형태로 발전한 것이 공무점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설계 및 선택 범위 등에서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 '하우스메이커(ハウスメーカー)'는 일본 전역에 걸쳐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주택전문건설회사를 말한다. 집 짓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대기업의 편의성으로 인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자체가 규격화되고 사전제작비율이 높기 때문에 설계 및 선택 범위 등 의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 "우리가 차를 살 때 딜러가 차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성능, 가격과 금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일본의 하우스메이커는 영업담당자가 집 짓기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서비스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심경미, 2020)."

***** 하우스메이커인 다이와하우스의 경우, 업계에서도 가장 긴 60년간의 보증제도(초기보증: 10~30년, 이후 유료 보증 포함)를 실시하고 있다(<https://www.daiwahouse.co.jp/jutaku/building/support>).

일본의 대표적 하우스메이커 중 하나인
다이와하우스의 주택 완공 후 보증기간 사례
출처: 다이와하우스 홈페이지.
<https://www.daiwa-house.co.jp/jutaku/building/support/service.html>



소규모 건축시장의 체계적인 산업화 및 상품화

대기업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아파트에 비해 그동안 소규모 건축시장은 개별화된 주체와 개인을 통한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비전문가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 제작 위주의 재래식 공법에만 수십 년째 머물게 되면서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들을 무수히 양산하였다. 소규모 건축물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도 높은 시장으로 성장시키려면 산업화와 상품화에 대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사업자를 넘어서 전문주택 건설회사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주 직접 공사를 폐지하거나,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 범위** 내로 지금보다 더욱 축소하고, 소규모 건축물 시장 전용 성능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금도 대표적 하우스메이커 중 하나인 미사와홈(ミサワホーム)은 1962년 일본 '건축기준법(건물의 안전과 성능만을 따로 분리한 법규)'의 제38조를 인정받는 공업화 주택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안국진, 2011, p.74). 이처럼 하우스메이커의 출현이 가능하려면 소규모 건축물용 법규 정리와 성능 기준 제시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도 소규모 건축물용 구조 기준 등은 있으나, 기타 관련 성능 기준은 일반 규모의 건물을 적용되는 건축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단독주택을 상품으로서 만들려면, 법적 성능의 명확한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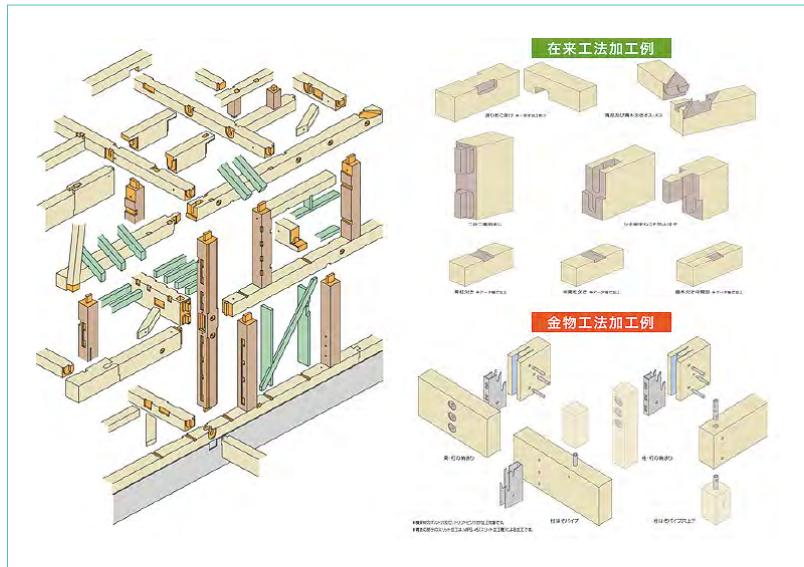
소규모 건축시장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체계 수립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합건설면허업체는 수익성 문제로 200m² 이하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 시장으로 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합건설면허와는 다른 소규모 건축물 전용 건설 면허를 신설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현행 종합건설면허 취득 기준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 경력자가 1명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금액을 정비하여 건설 기술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고, 이들이 지역 내 소규모 건축시장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부실한 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자격증 취득 여부를 떠나 실제 관련 공정에 임하였는지, 그러한 시공능력이 있는지까지 건설기술인력을 까다롭게 검증한다. 경영진을 비롯한 대표자는 최소 5년 이상의 건설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최민수 외, 2015, p.19). 소규모 건축물을 전문으로 하면서 매출 규모와 세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이들을 통해 점진적인 산업화의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화, 주택 부품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만 별도로 제시된다면, 그에 충족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부품이나 부재의 공장 생산화를 진행한다면, 마치 블록 장난감처럼 동일한 성능의 개별 단위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부품화·규격화를 전제로 대량생산을 꾀하였던 하우스메이커와 유사하게, 과거 재래식 방식으로 집 짓기를 이어오던 일본의 소규모 공무점들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CAD·CAM과 연계하여 공장에서 미리 목조의 접합부를 가공해 오는 프리컷(Pre-Cut) 방식을 통해 현대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일본 내 대다수의 목조주택들이 이 방식을 통해 목구조의 설계 및 철물과의 결합을 구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일본식 중목구조 또한 이렇게 일본에서 가공된 목조부재와 철물 등을 그대로 수입하여 짓고 있다.

* 앞서 소개한 공무점과 같은 소규모 주택건설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단독주택 공사 중 공무점이 짓는 비율은 50%에 달한다.



공장에서 사전 가공되어 철물들과 결합되는 프리컷 공법 소개 사례

출처: 테크노우드웍스 홈페이지. <http://technowoodworks.com/service/precut.html>

이처럼 부품화와 공장 제작화는 하우스메이커와 같은 대형 회사뿐 아니라 지역 내 공무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균일한 품질과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서도 부가적인 산업(가공기계 발달, 구조설계 연계, 원자재 가공수출 등)을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의 접점 또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조주택의 적극적 도입과 관련 제도 수립

상기의 제조업화되고 부품화된 시장을 위해서는 목조 건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진흥 목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내 현장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방식으로는 개별 현장마다 각각 대응한다는 점에서 제조업화·산업화에 한계가 발생한다. 최근 들어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서는 기존 주거지역의 수십 년 된 노후 건물들에 대한 대체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는 진입로의 폭이나 주변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목조는 부품화가 쉽고, 가공이 용이하며, 접합 및 조립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공사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량생산에 용이하므로 단가 또한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단독주택 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목조주택이 주력 상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도 최근 들어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목조주택 착공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연간 1만 건이 넘는 목조건축이 지어지고 있으나 현대식 목조주택은 북미식 경골목구조나 일본식 중목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구법만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목재를 비롯한 관련 부재와 철물, 심지어 구조 해석까지 해외에 거의 다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조로 집을 지었음에도 지금은 한옥이라는 일부의 전통 건축만 남았을 뿐, 사실상 목조건축의 한국식 현대화는 빌 걸음을 멈춘 지 오래다. 중장기적인 조림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년 커가는 국력에 맞게 이제는 한국식 목조건축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시장의 산업화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소규모 건축시장의 산업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나가며

소규모 건축시장은 그동안 중대규모 건축물들에 비해 관련 법령이나 건설업 기준 등이 따로 구축되지 않고, 사실상 건축주 직접 공사 제도 등을 통해 개인 주체 간의 공급과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몇 해 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독주택으로 대표되는 연면적 200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시장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2021년에도 건축주 직접 공사로 가장한 일괄하도급 공사 방식이 대다수로 통용되고, 시공 품질은 천차만별이면서도 완공 후에는 하자보증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처럼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하우스메이커는 주택전문건설회사로서, 주택을 부품화하고 규격화하며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단독주택 시장을 산업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구법과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최장 60년에

* “산림청에 따르면 1999년 국내 건축허가 건수는 총 9만 5,286건으로 이 중 목조건축물은 1,265건, 전체의 1%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2018년)는 전체 27만 811건의 건축허가 건수 중 목조건축은 1만 2,750건으로 전체의 5% 비중을 보여 최근 10년간 10배 가량의 성장률을 보였다(전일웅, 2019).”

결친 보증제도를 구현하는 등 상품으로서 단독주택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지역 내 밀착되어 있는 소규모 주택건설회사인 공무점 또한 프리컷 공법을 활용한 목조주택으로 균질한 품질을 구현하고, 부품화된 부재 사용 등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양질의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단독주택시장은 산업화라는 큰 틀 안에서 대형 전문 건설 회사와 소규모 지역 법인이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또한 단독주택 시장의 제조업화 및 부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소규모 건축물 전용 성능 기준 제시, 건설업 면허 별도 신설 혹은 취득 기준 완화, 목조 건축의 육성 지원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독주택의 산업화를 통한 상품으로서의 시장 형성은 아파트에 과도하게 집중된 주거 기능을 분산시키면서도, 구도심 내 노후 건축물의 교체 산업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이미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국내 여건과 기술 역량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소규모 건축시장의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서수정. (2019).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auri brief 19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국토교통부. (2017).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
- 3 최민수, 최은경. (2015). 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계 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 4 안국진. (2011). 일본 목조주택의 형성과정과 공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11(2).
- 5 심경미. (2020). 하우스메이커를 통한 일본의 집짓기. 전원속의내집 225호.
- 6 전일웅. (2019). 목조(木造)문화의 ‘제2부홍’…산림청. 목조건축 대중화 선도. 아시아경제. 5월 1일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110543587099>
- 7 建築着工統計調査. <https://www.e-stat.go.jp>
- 8 다이와하우스 홈페이지. <https://www.daiwahouse.co.jp>
- 9 테크노우드웍스 홈페이지. <http://technowoodworks.com/>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그간의 건설산업 일변도의 관련 산업 진흥정책에서 확대·변화된 개념으로 건축설계를 포함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이 국토교통부의 정책 분야로 추가되었고, 건축과 토목을 하나의 법령에서 구분 없이 규정하여 왔던 제도적 틀 또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2014년 법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진흥정책 발표와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이 과거에 비해 발전되고 있다는 체감을 하기가 어렵고, 현행 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이 건설 위주와 토목 위주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가 건축서비스산업을 넘어서 건축산업의 진흥을 논의하는 데 있어 먼저 필요한 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은 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관리와 산업의 진흥을 하나의 법령에서 관리하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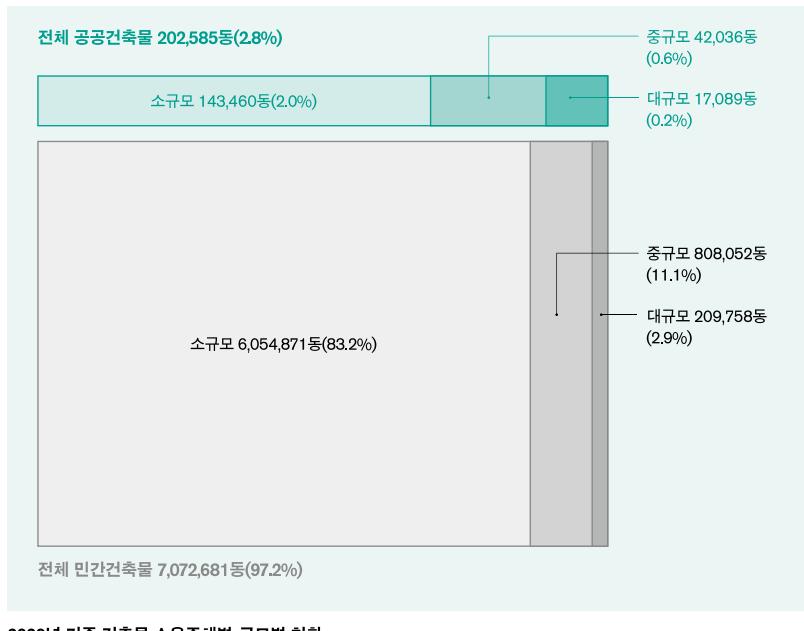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건축물 수는 약 727만 5,000동이며, 이 중 민간건축물의 비중이 97.2%(약 707만 3,000동)를 차지하며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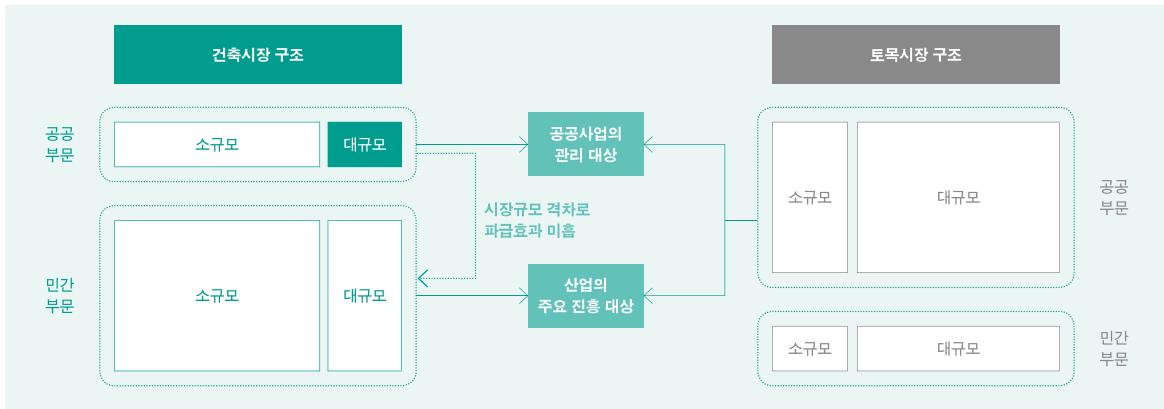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연구책임: 염철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물의 비중은 2.8%(20만 2,000동)에 불과하다. 또한 규모별로 보면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약 619만 8,000동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은 민간의 소규모 건축물(83.2%)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시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주로 총공사비가 300억 원 또는 5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대규모 공공건축만 해당하여 전체 건축물의 0.2%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공사비 규모로 환산할 경우 20억 원 이상 규모가 되며, 이는 중규모와 대규모의 공공건축만 해당하여 전체 건축물의 0.8%만 해당 법령에서 관리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진흥법에서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대가 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의 표준화,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한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그동안 건축 관련 법령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설계 이전의 기획업무와 설계의도 구현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는 공





공공사업관리와 산업 진흥과 관련한 건축시장과 토목시장 구조의 차이

공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에 집중하고,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또한 공공 사업 관리와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행되는 양상이 지속되어 왔다. 도시나 토목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용역과 매출이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공사업의 관리와 산업 진흥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민간건축사업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특성상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진흥정책 추진은 실효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산업 분야와 법령체계 간의 미스매칭

건축산업의 요소를 건축사업·건축서비스·건축공사·건축사업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건축사업의 경우 공공 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관리와 지원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 건축서비스의 경우 공공 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주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도 일부 관리를 위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민간 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연구개발·표준화·정보체계 등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공공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리와 지원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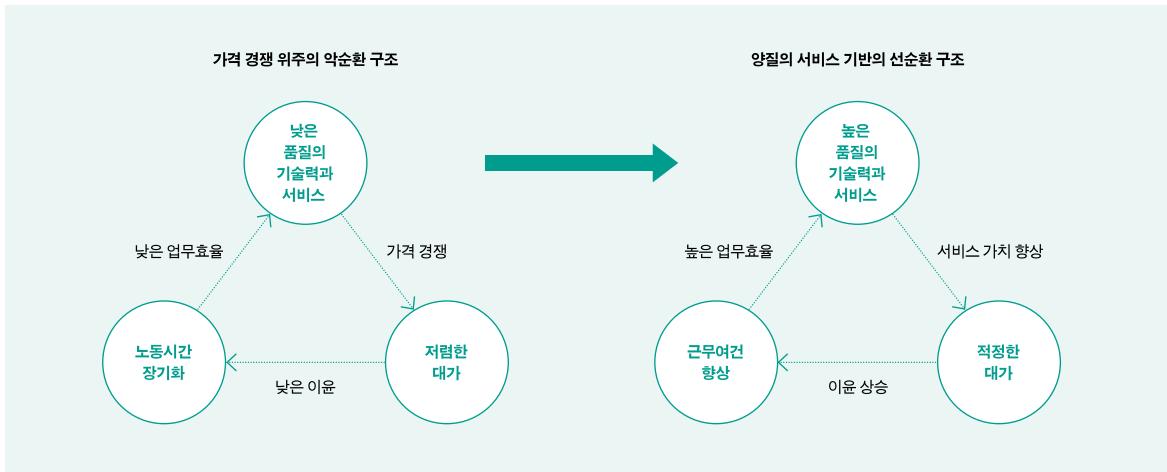
관련 제도	건축사업		건축서비스		건축공사		건축사업체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건축서비스	건축공사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업체의 경우 건축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한 법령은 없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산업을 대상으로 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 부문의 건축사업과 건축서비스의 관리나 건축서비스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은 공공 부문의 건축사업 관리와 건축공사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건축공사의 관리나 건축공사 업체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령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건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향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민간 부문의 건축사업·건축서비스·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으며, 건축서비스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향후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우선 필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규모-공공 부문 중심에서 중소규모-민간 부문 중심으로 정책 비중을 전환하는 일이다. 토목산업



민간 소규모 건축시장 구조의 전환

진흥 정책과 유사한 공공 부문 중심의 진흥정책에서 전환하여 내수 중심형, 중소규모 사업 중심형, 국민 삶과 경제활동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부문의 중소규모 건축산업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열악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시장의 ‘가격 경쟁 기반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기반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새로운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구조 다변화 여건 조성이다. 향후 건축산업의 여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선 질 높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디품종·소량생산으로 건축생산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 감소, 소단위 및 필지 단위 건축사업 증가로 소규모 건축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신축 건설시장의 축소에 따라 분양 중심의 건축사업에서 운영 중심의 건축사업으로 무게 중심이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설계 시공 위주의 건축산업 업역에서 확장된 개념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사업의 기획부터 건축물의 운영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 IT 기술 등을 활용한 컨설팅과 플랫폼 운영, 새로운 공간상품의 제공, 타 분야

와의 융·복합형 건축사업 확대 등의 움직임이 건축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이상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축 중심의 건축사업 체계를 재생형 건축사업 체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와 건축시공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 등 건축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진흥정책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건축사업과 관련한 소비자의 세부적이고 잠재된 수요를 이끌어 내면서 맞춤형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건축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산업 진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건축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이다. 우선 건축산업을 명확한 정책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건축산업의 정의와 건축산업에 포함되는 산업 분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축서비스와 건축공사 등 1차적인 건축산업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 및 정보 체계 구축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자 정책 추진의 성과와 개선점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건축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전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화 양상이 지속되고, 소수의 대기업과 대부분의 소기업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건축사업체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기반의 우수 중소규모 건축사업체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신규 우수인력 및 혁신업체 육성 지원,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업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한 것인데, 주요 대상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중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과제가 많으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4~6개의 과제가 해당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소규모-중규모-대규모의 시장 부분별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과제들은 건축산업과 관련한 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별 주요 적용대상 종합

제도개선 과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1. 건축산업의 제도적 정의와 범위 명확화	●	●	●	●	●	●
2. 건축산업 통계 구축	●	●	●	●	●	●
3. 소규모 민간건축 시장구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유도수단 마련	-	-	-	●	-	-
4. 노후 건축물의 재생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정립	○	○	○	○	●	●
5. 다양한 융·복합형 건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	●	-	●	●
6. 건축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	-	●	●	-
7. 건축사업 기획 단계 컨설팅 업무 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	-	●	●	-	●	●
8.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지원책 마련	-	●	●	-	●	●
9. 명확한 책임과 적정 대가 기반의 공정한 계약체계 구축	●	●	●	●	●	●
10. 건축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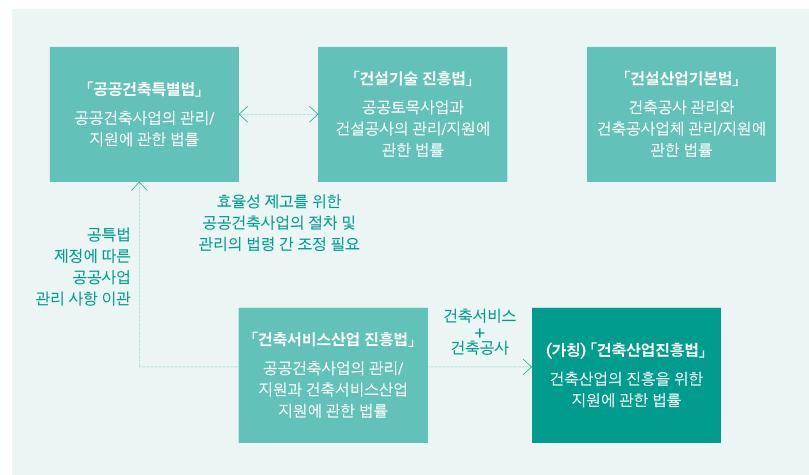
축사업, 건축서비스, 건축공사, 건축업체에 대한 ‘관리’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과제를 담아내기에는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건축특별법」(안)은 공공건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4장(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해당하는 조문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의 질차 및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조문이 없어지게 된다. 「공공건축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할 때, 공공건축사업에서의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관계 설정은 「공공건축특별법」(안)과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관계로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수단에 중점을 두는 법령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관련 제도	건축사업		건축서비스		건축공사		건축업체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건축서비스	건축공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공공건축특별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관리	-	-	-	-	●	●	-
	지원	-	-	-	-	○	○	●

다만 협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법령체계를 유지한 채 건축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법령의 적용대상의 범위, 타 법과의 중복 및 관리와 지원의 법령수단 혼선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건축산업과 관련한 법령은 원칙적으로 위의 표와 같이 법령의 대상별 적용의 위계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타 법과의 관계 설정과 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가칭)「건축산업진흥법」으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가칭)「건축산업진흥법」과 관련 법령 간의 차별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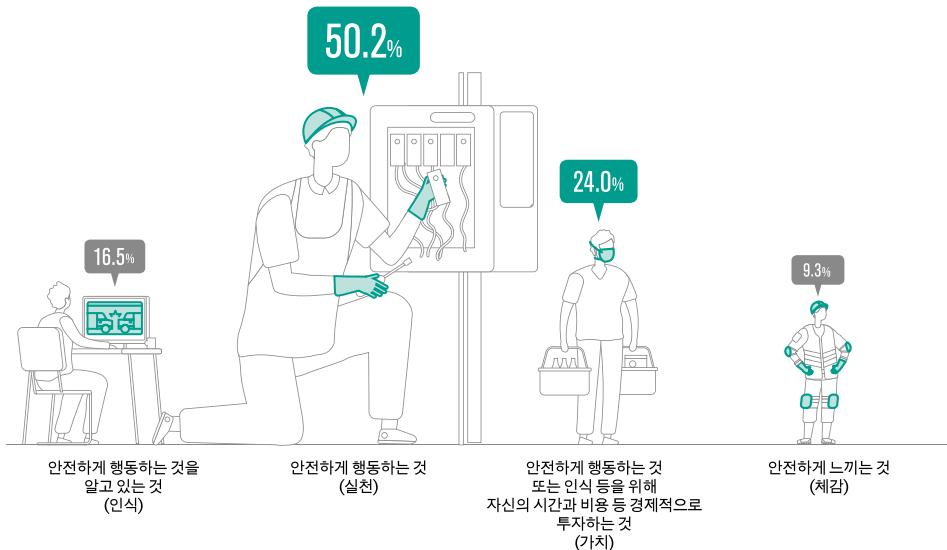
판단된다. 이 경우 건축산업 진흥정책의 대상인 건축사업, 건축서비스, 건축공사, 건축업체별로 관리와 지원에 대해 각 법령의 성격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대해 필요한 주도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칭)「건축산업진흥법」은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지원에 중점을 둔 법령으로서 성격을 규정하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 진흥 측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논의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타 산업에 비해 다층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많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건축산업의 진흥은 지금까지처럼 명확한 업역 간 분리를 통해 자 기만의 고유한 시장영역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기획, 설계, 시공, 감리, CM, 운영, 유지관리, 부동산, 공간정보에 이르기까지 건축산업과 관련한 영역 간의 융·복합과 연계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창출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할 때이다.

국민들은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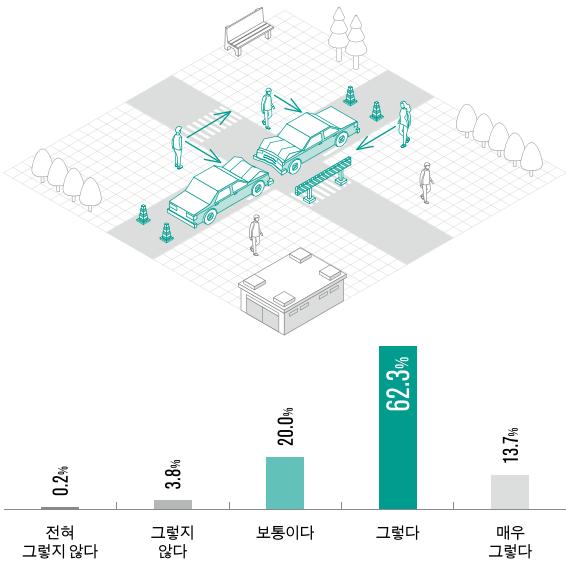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의 6대 사회 안전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법정감염병)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안전인프라의 중요도, 공공의 노력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 국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비례 할당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Q '안전의식'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안전의식'은 안전하게 행동(실천)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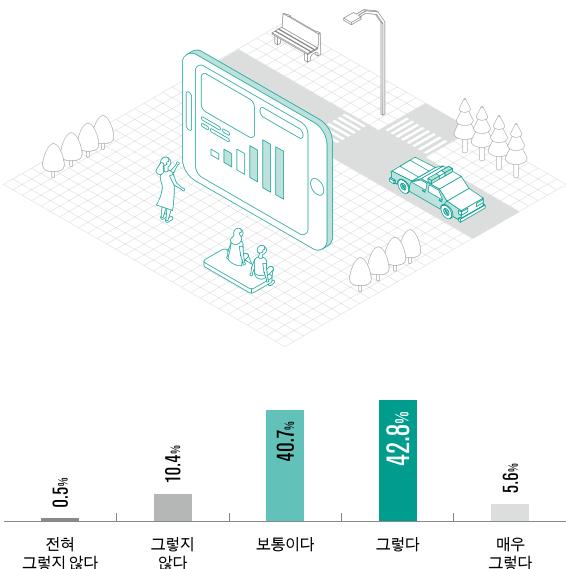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의식」은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할 때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측정하는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쉽게도 안전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모호하다. 따라서 안전의식에 대한 하위개념을 인식, 실천, 가치, 체감의 범주로 구분해 질문했다. 일반 국민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 즉, '실천'이 안전의식이라고 답했다. 시간, 비용 등 안전에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가치'의 답변 비율도 높았다. 즉, 안전의식이 단순히 인식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천하고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Q 안전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면 안전의식이 개선될까?

A 눈으로 보거나 직접 경험한 안전사고는 안전의식을 개선

안전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험은 기준에 갖고 있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목격 또는 경험한 안전사고가 인식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물었다. 결과적으로 안전인식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76%에 달했다. 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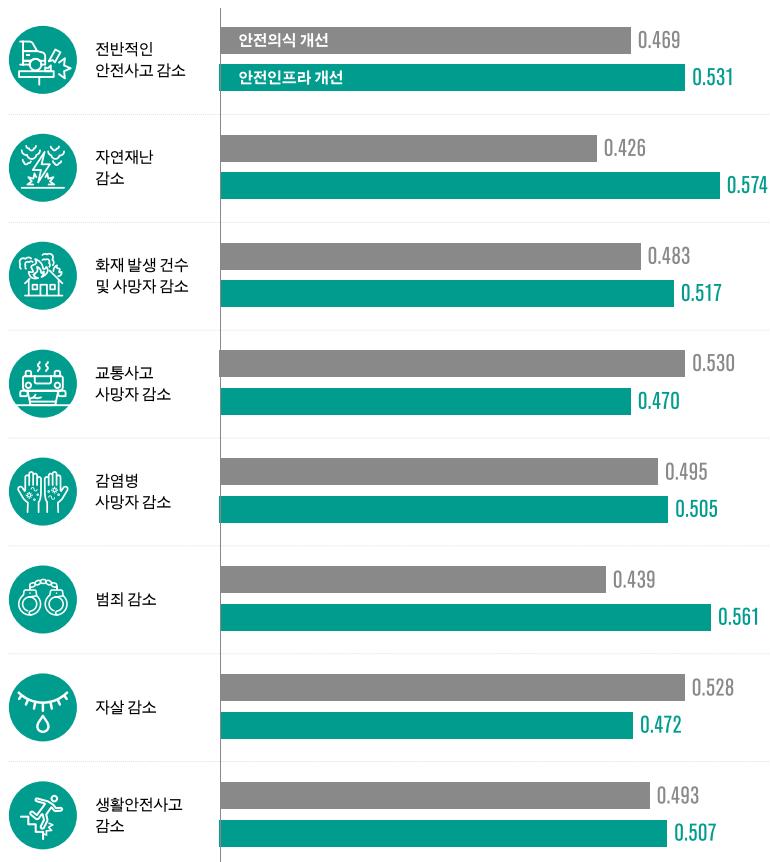


Q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통계가 체감안전도와 동일하다 생각하는지?

A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사고 통계값은 대체적으로 체감도와 유사

국민들은 거주 지역의 안전사고가 줄었다는 통계를 지역 뉴스 미디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종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사고 통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안전도가 체감되는 데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 결과, 미디어와 통계자료로 인지하게 된 지역의 안전도와 실제 거주하며 느끼는 안전도가 대체적으로 동일한 경향으로 늘거나 줄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중도적 의견이 많아 높은 상관성이 보긴 어렵다.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44%, 만 65세 이상 연령층은 48.2%가 통계자료에 따른 안전도 체감변화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답했다.

Q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인프라 개선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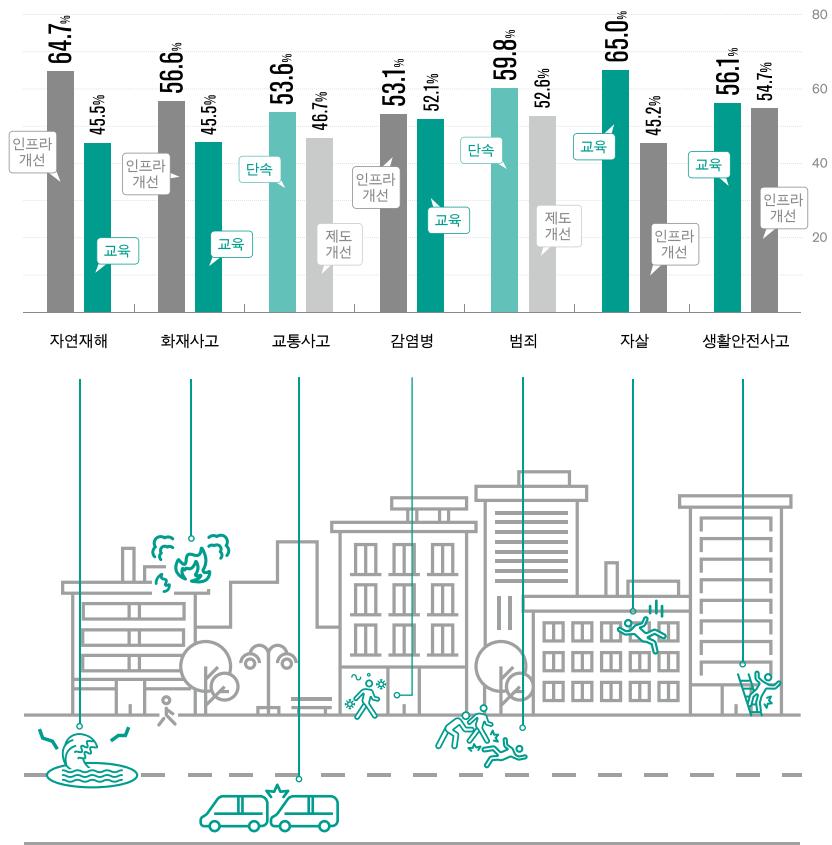


A 전반적으로 안전인프라 개선이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분야에 따라 다름

6대 사회안전과 더불어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53.1%의 국민이 안전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난과 범죄, 화재 및 감염병, 생활안전사고는 대체적으로 시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안전유형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안전유형에 따라 의식 개선과 인프라 개선의 중요도를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1+2순위)



A 인프라 개선, 단속, 교육이 효과적

국민들은 자연재해, 화재, 감염병은 인프라 개선이 효과적인 안전유형으로 보았고, 교통사고와 범죄는 단속, 자살과 생활안전사고는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응답했다. 제도 개선과 홍보는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으나, 1,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는 제도 개선이, 자살은 홍보가 대체적으로 효과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 6대 사회안전, 자연재해에 대해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단속', '교육', '홍보' 이상 5개 항목의 중요도를 물었으며, 1, 2순위 합산 결과 상위 2개 항목을 아래 그레프로 제시하였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44

Winter 2021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일본에서는 탈탄소사회의 실현, 목재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조건축물 진흥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목조건축물 진흥 정책의 확대 과정과 주요 내용, 시사점을 이번 호 해외동향에서 살펴본다.
국내동향으로는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19년 내장 등을 무질화한 공공건축을 사례



포장된 개선문



타이중 녹색 화랑



해외

일본의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물

진흥 정책 강화

064

국내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070

일본의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물 진흥 정책 강화 | 국토의 약 3분의 2를 산림이 차지하는 세계적 산림국 일본에서는 산림자원을 건축물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 국토 보전이란 공익적 기능, 임업 목재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에 명시된 특별건축구역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물 진흥 정책 강화

권용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조교수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촉진법’ 제정과 성과

일본에서는 전후 조성된 인공림이 본격적인 이용기 를 맞이하자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목재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던 건축물에서의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 5월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법 제정 당시에는 목조 비율이 낮고 잠재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솔선하여 목재 이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 결과,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을 염두에 둔 규정이 마련되었다.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은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정부가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화율은 2018년 90.6%, 2019년 90.0%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3층 이하 저층 공공건



2019년 목조로 정비된 공공건축물 사례

출처: 農林水産大臣, 國土交通大臣(2021.3.24.)



2019년 내장 등을 목질화한 공공건축물 사례

출처: 農林水産大臣, 国土交通大臣(2021.3.24.)

축물의 바닥면적 기준 목조율은 2010년 17.9%에서 10.6% 증가한 28.5%까지 상승하였다. 전체 공공건축물의 바닥면적 기준 목조율도 법 제정 시 8.3%에서 2019년 13.8%까지 상승하였다. 덧붙여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한 조치 시행 상황을 보면, 2019년 3층 이하 공공건축물 72채가 목조로 정비되었고, 132채의 내장 등이 목질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과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촉진법’ 개정

일본에서는 내진 성능과 방내화 성능 등 기술혁신이나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으로 인해 목재 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건축물 외에도 민간건축물 중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목재 이용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2050년 탄소중립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립 → 벌채 → 목재 이용 → 재조립’이라는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 추진이 필수라는 인식이 일반화하면서 저층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목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비주택 분야나 중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21년 6월 공표된 ‘2050년 탄소중립에 수반하는 그린 성장전략(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에서는 저층 주택의 경우 약 80%가 목조인 데 반해 비주택 중고층 건축물의 경우 목조율이 10% 미만임을 지적하고, 비주택 중고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을 주문하였다. 같은 달 공표된 ‘지역 탈탄소 로드맵(地域脱炭素ロードマップ)’에서는 탈탄소사회를 위한 제도 혁신과 관련해 공공건축물이나 중 대규모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같은 달 각의 결정된 ‘성장전략 폴로업(成長戦略フォローアップ)’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으로서 ‘목조 건축물 보급 확대’를 명시하고, ‘2021년에 건축기준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2022년 이후에 제도적 조치를 마련함과 함께 CLT(Cross-Laminated Timber) 등을 활용한 선도적 설계 및 시공기술 도입 지원이나 설계에 관한 정보 포털사이트 정비, 설계자 육성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성립하였고, 2021년 6월 18일 공포된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법률명·목적 개정 및 기본이념 신설 등

개정법은 법률명 자체를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목적 규정에 ‘탈탄소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목적 규정 제검토에 더해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3조). 목재의 이용 촉진은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작용 보전 및 강화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기타 환경에 대한 부하 저감 등이 도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산촌과 기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 기본이념 규정에 담겼다.** 이 내용은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사업자와 국민의 노력, 관계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새로 추가한 임업 목재산업 사업자의 노력(개정법 제6조)***을 비롯해 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국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목(木)’이라는 한자

가 10(十)과 8(八)로 분해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10월 8일을 ‘목재 이용 촉진일’로, 10월을 ‘목재 이용 촉진 월간’으로 법정화하였다(개정법 제9조). 지금까지도 일본 임야청은 매년 10월을 ‘목재사용 추진 월간’이라고 하고, 목재 이용을 독려하는 집중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를 생각하면 위 ‘목재 이용 촉진 월간’ 등의 법정화는 기존의 활동을 행정, 각종 단체, 기업, 국민 등이 연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부터는 젊은 세대나 목재 이용에 관심이 적은 사람에게도 우드 체인지(WOOD CHANGE)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알리는 등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정법에서는 목적 규정에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이념 책정, 목재 이용 대상을 공공건축물에서 건축물로 확대,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 및 건축용 목재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공급 확보, 목재이용촉진본부 설치, 임업에 대해 목재산업의 지속적이고 전면한 발전 도모,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추가 명시하였다.

** 제3조(기본이념) ①목재 이용 촉진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그것을 위한 탈탄소사회 실현이 일본의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산림에서의 조림, 보육 및 별재, 목재의 제조,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과 산림에서의 별재 후 조림이라는 순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작용 보전 및 강화가 충분히 도모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목재 이용 촉진은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의한 환경에 대한 부하 정도가 큰 자재 또는 화석자원(원유, 석유 가스, 가열성 천연가스 및 석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하여 산림으로부터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목재를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그 밖의 환경에 대한 부하 저감이 도모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목재 이용 촉진은 산림이 가지는 국토 보전, 수원 함양, 그 밖의 다면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됨과 함께 임업 및 목재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산촌,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개정법에서는 임업·목재산업 사업자가 건축용 목재 등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힘써야 한다는 뜻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일본 기업 라쿠텐이 목재 이용 촉진일을 맞아 진행한

우드 체인지 프로젝트의 로고

출처: 리쿠텐 우드 체인지 프로젝트 웹페이지,

<https://event.rakuten.co.jp/area/japan/woodchange>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확충 등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는 기본방침 등의 대상을 공공 건축물에서 건축물 일반으로 확대한 것이다(개정법 제10~12조).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촉진법' 제정 후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목질화가 활성화되었고, 민간 주택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목조화 목질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토교통성 건축작공통계조사 2020년에 따르면 저층(1~3층) 주택의 목조율은 80%에 이른 데 반해 4층 이상 중고층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목조율은 모두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주택의 경우 1층 비주택은 19.3%, 2층 비주택은 17.6%, 3층 비주택은 3.0%라는 낮은 목조율을 보였다. 목재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주택이나 중고층 건축물의 목조화 목질화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목질내화부재나 CTL 등 새로운 제품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 기술 면에서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지에서 비주택 중고층 건축물 목조화 등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이 연계해 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개정법에서는 목재 이용촉진 대상을 건축물 일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목조건축물의 설계 시공에 관계된 선진적 기술 보급 촉진(개정법 제13조),* 강도 등이 우수한 건축용 목재 제조기술 개발 보급 촉진(개정법 제16조)**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 등이 '건축물 목재이용 촉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 지방공공단체가 협정체결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5조). 사업자 측에서 보면, 정부와의 협정체결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 인지도나 평판 향상, ESG 투자 등 새로운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 *** 정부의 재정상 배려 등의 이점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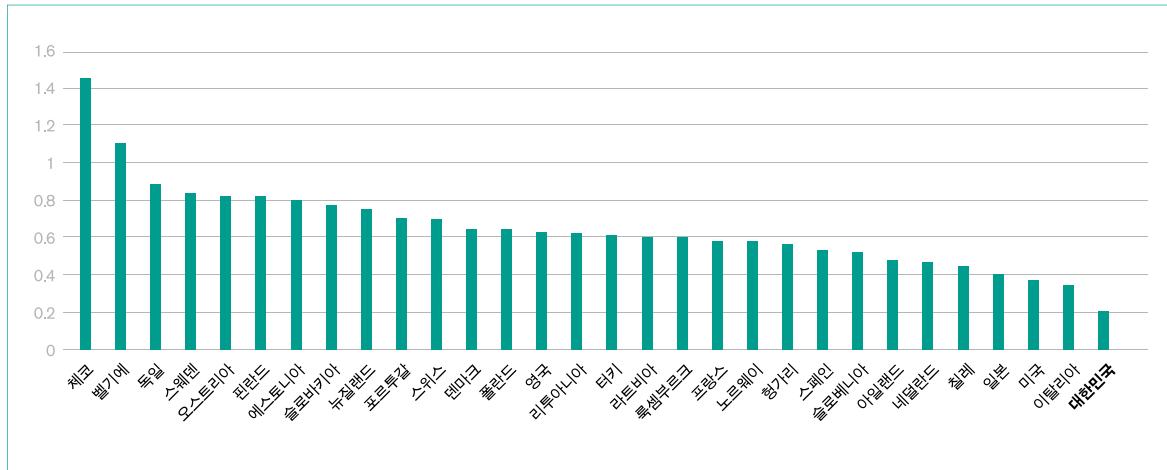
목재이용촉진본부 설치

개정법에서는 정부 추진 체제로서 농림수산성에 농림수산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계대신(총리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등)을 본부원으로 하는 목재이용촉진본부 설치를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5~30조). 목재이용촉진본부는 기본방침 책정 및 실시 추진에 관한 사무,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무 등을 담당하며(동법 제25조), 이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개진, 설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 제13조(목조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계된 선진적인 기술 보급 촉진 등)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목조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계된 선진적인 기술 보급 촉진, 중고층 목조건축물 또는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인재 육성, 건축용 목재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한다.

** 제16조(강도 등이 우수한 건축용 목재 제조에 관계된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건축용 목재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강도 또는 내화성이 뛰어난 건축용 목재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건축용 목재 제조에 관계된 기술 및 그 제조에 요하는 비용 저렴화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한다.

*** 목재 이용량을 토대로 환경 보전에 대한 공헌도가 평가된다면, 그것이 ESG 투자 등 새로운 자금조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OECD 국가의 산림이용률

출처: OECD. Stat. (2019 or latest year available)

2021년 10월 1일 목재이용촉진본부는 ‘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해 공개하였다. 이는 개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인데, 기본방침에서는 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 의의 및 기본적 방향, * 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정부가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목표, *** 기본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정하는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기본적 사항, **** 건축용 목재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그리고 기타 사항***** 을 정하였다.

마치며

국토의 약 3분의 2를 산림이 차지하는 세계적 산림국 일본에서는 산림자원을 건축물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 국토 보전이란 공익적 기능, 임업 목재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계된 일본의 동향은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

*

국산 목재 이용 확대는 임업·목재산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산림의 적정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생각할 때, 국가가 지방공공단체·사업자·국민과 연계·협력을 도모하면서 기본이념을 토대로 비주택 건축물이나 중고층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에서의 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감을 기본적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목조건축물의 설계·시공에 관한 선진적인 기술 보급이나 인재 육성, 건축용 목재·목조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도모함과 함께 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협정 제도에 따른 대처를 지원하는 것, 공공건축물에서 솔선하여 목재 이용을 도모하는 것, 규제나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을 도모하는 것 등을 통해 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촉진한다. 또한 ‘목재 이용 촉진일’이나 ‘목재 이용 촉진 월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목재 이용 촉진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

국가는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에서는 제재 등 외에 CLT, 목질내화부재 등을 활용하면서 비용·기술 면에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 목조화, 내장 등의 목질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부처의 장은 계획에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방침(목조화 및 내장 등의 목질화 등), 목재 이용 목표(목조화를 도모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나 중점적으로 내장 등의 목질화를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의 부분 등), 추진 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재 공급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목재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처, CLT처럼 강도 등이 뛰어난 건축용 목재 제조기술 개발 등을 촉진해 나간다.

기타 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① 도로부현 방침 또는 시정촌 방침 작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건축물 정비 등에서 비용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비용에의 영향과 목재 이용의 의의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③ 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산림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림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산림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산림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나 다른 국가보다 험난한 탄소중립 실현 여정이 예상되는 상황* 등을 생각하면, 산림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21년 10월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도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30억 그루 나무 심기’라는 기존의 논의 목표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복원’으로 변경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한 산림순환경영 강화나 목재 제품 이용 촉진 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산림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활용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건축물 등과의 관계 설정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021년 10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0% 상향 확정[기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2018년 대비 26.3%) 감축]되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늦은 배출정점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목표이다.

참고문헌

- 1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2021).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 발표, 10월 27일 보도자료.
- 2 林野庁. (2021.10.1.) 「建築物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基本方針」の策定について. <https://www.rinya.maff.go.jp/j/press/riyou/211001.html>
- 3 林野庁. (2021.10.1.) 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改正前: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https://www.rinya.maff.go.jp/j/riyou/koukyou/>
- 4 中大規模木造建築ポータルサイト. <https://mokuzouportal.jp/index.html>
- 5 建築物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基本方針(令和3年10月1日木材利用促進本部決定). <https://www.rinya.maff.go.jp/j/press/riyou/attach/pdf/211001-2.pdf>
- 6 農林水産大臣, 国土交通大臣. (2021.3.24.) 令和元年度 公共建築物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向けた措置の実施状況の取りまとめ. <https://www.rinya.maff.go.jp/j/press/riyou/attach/pdf/210326-2.pdf>
- 7 OECD. Stat. <https://stats.oecd.org/>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조관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시설사무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까지 전국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0개소이며, 주로 서울과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채광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각적인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또한 2021년 1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 제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커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건축기본법」과 「건축법」의 목적을 차용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에 명시된 특별건축구역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운영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위원회에서 특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2021년 10월 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합계
구역 지정	건수(건)	4	25	12	70
	면적(m ²)	3,002,763	953,969	1,259,337	588,726
5,804,795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지자체 공문 조사 결과.

별건축구역을 심의하는 경우에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참여 주체 및 지정 대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기관으로서 지정권자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민간에서도 지정 제안자로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시·도지사에게 신청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이나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특별건축구역 절차

특별건축구역은 당초 지정신청기관(공공)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

안자(민간)가 신청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다만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와 일부 절차가 다르다.

먼저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에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으나, 특별건축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에 대해 적용배제, 완화, 통합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심의를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업은 구역 지정과 건축물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지정제안자(민간)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된다. 이때 지정제안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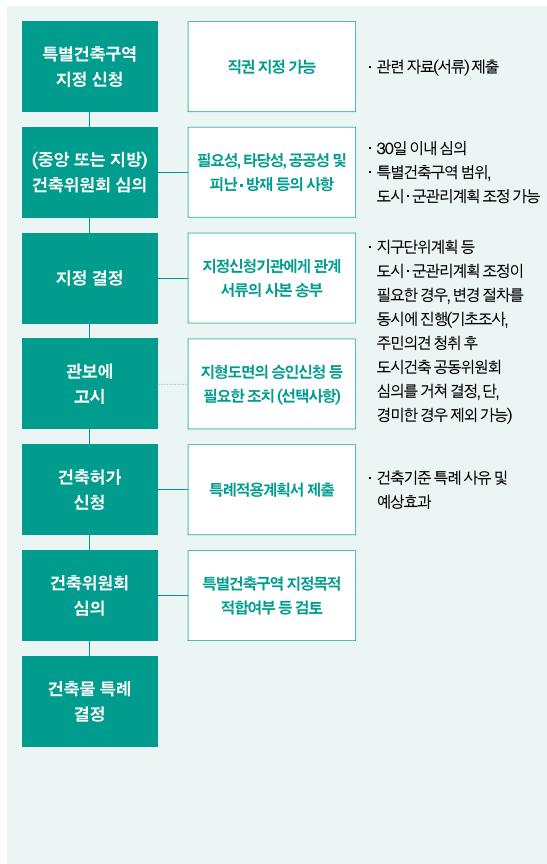
특별건축구역 제안 전에 해당 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만약 지정제안자가 이를 생략한 경우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에 앞서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지정신청 서류 구비, 기초지자체장 의견청취가 완료된 경우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이 제안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부여 절

차는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검토사항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시 지정신청기관 및 건축위원회

공공 제안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민간 제안 절차



위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하였다.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시 검토사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그 밖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각각의 기준별로 특례 부여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여 특별건축구역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특례를 받은 이후에도 지정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계자가 의도한 내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설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기능·미관·환경 등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특별건축구역과 관련한 건축물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검토사항

구분	내용	
필요성	국제행사 개최,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 및 경관 향상, 건설기술 발전, 건축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활성화 등 건축기준 완화 필요성 검토	
타당성	주변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성·정합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 건축기준 완화 타당성 검토	
공공성	생활공간적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안전한 조성, 사용자의 건강 및 장애인·노약자·임신부 등의 이용 배려, 피난·방재 강화, 범죄예방 등
	사회적	주거환경 보호, 기술변화 대응, 미래세대 계승 자산 조성, 자원 재이용 및 자연환경 보호, 주변 경관 조화, 탄소중립 대응,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다원적 문화 부응, 복리시설 개방·공유 등
	문화적	건축의 문화적 가치 향상, 전문가 창의성 존중, 지역 풍토·역사·환경·경관 등 맥락 고려, 활력 있는 가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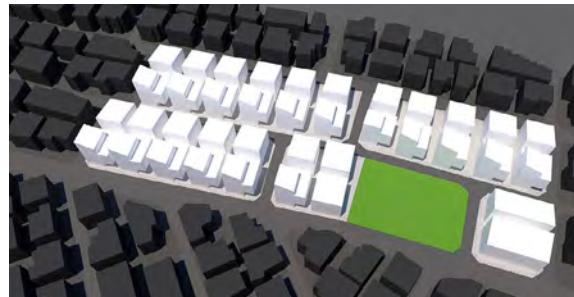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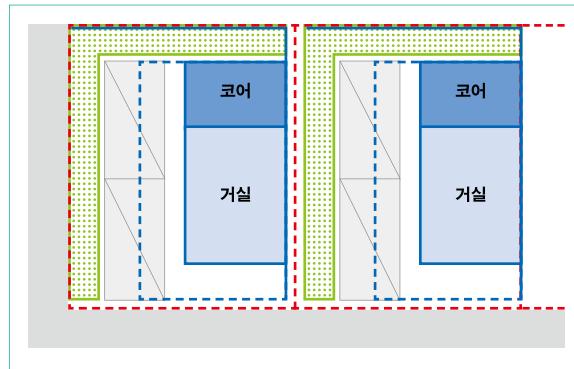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자체 작성.

규정별 건축물 특례 심의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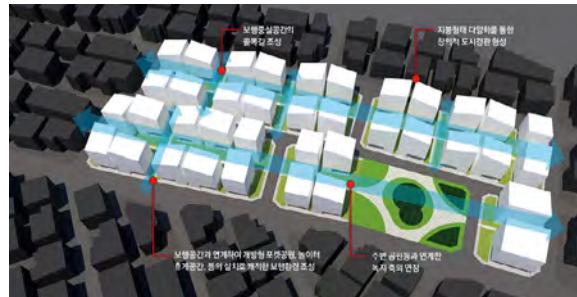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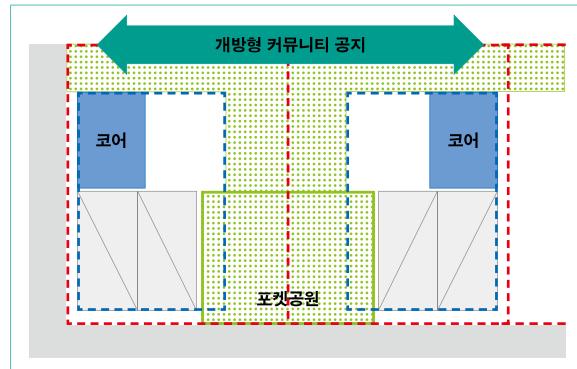
건축기준	고려사항
적용 배제	<p>대지의 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건축 등 경관 향상, 공해저감 노력, 주변 녹지 분포 등 <p>건축물의 건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 통로 확보, 적절한 통풍·채광·개방감 확보 등 <p>건축물의 용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반시설 용량, 사람들의 거주성 밀도 영향 등 <p>대지 안의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광, 통풍, 피난, 유지관리, 통행량, 경계분쟁 등 <p>건축물의 높이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경관, 통풍, 채광, 개방광 등 <p>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지 기준 거실창문 일조량 연속 2시간 이상 확보· 대지 내 일조 영향, 사생활 보호, 화재확산 방지 등
주택건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준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 확보
적용 완화	* 피난, 설비, 승강기, 에너지 등
통합적용	*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자체 작성.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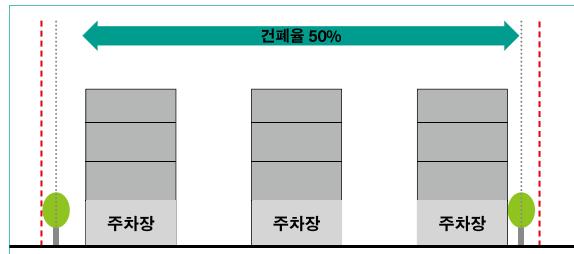
특별건축구역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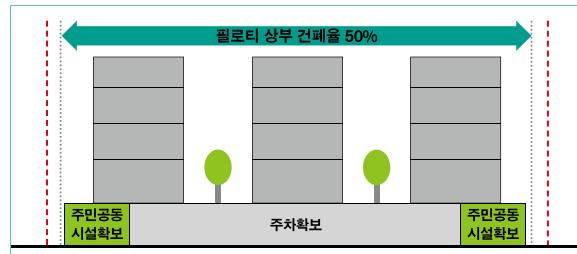
저층주거지에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짓는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현행



특별건축구역 적용



저층주거지에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짓는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령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적용 예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주로 세부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한 실제 사례와 적용 가능한 예시에 대하여 별표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예시는 저층주거지에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짓는 경우이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단독·다가구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이격거리도 완화하여 건축물 사이 여유공간을 한곳에 모아 포켓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한 예시이다.

두번째 예시도 저층주거지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짓는 경우이다. 건폐율 완화를 통해 인접 건물 간 저층부를 하나의 데크로 통합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다.

마치며

특별건축구역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창의적인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처럼 특이한 형태의 건축물 적용 시에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여건 변화에 건축 분야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축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일종의 샌드박스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건축공간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리의 ‘포장된 개선문’ 설치와 시사점

유무종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도시설계사

2021년 9월 18일 수천 명의 사람이 샹젤리제 거리에 모여 프랑스의 위대한 기념비 중 하나가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코로나19로 당초 설치가 예정되었던 2020년 9월보다 1년 정도 늦은 2021년 7월 16일,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약 1,200명의 작업자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반짝이는 블루실버색의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천으로 파리의 개선문을 둘러쌌다.

이 ‘포장된 개선문’은 대표적인 대지예술가이자 설치예술가 부부 크리스토(Christo, 1935~2020)와 잔클로드(Jeanne-Claude, 1935~2009)의 작품이다. 크리스토는 1962년에 처음으로 개선문의 포토몽타주를 만들었고, 1988년에는 콜라주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그가 계획한 지 60년 만에 구체화된 것이다. 1,400만 유로(약 187억 원)의 설치 가격에 적잖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리스토는 이 설치물을 작업하는 데 공적 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작가의 예비 연구와 드로잉 및 콜라주 판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 부부가 프랑스에서 벌인 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5년 그들은 이미 풍네프 다리를 포장한 경험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도시에 있는 역사적 기념물들을 천으로 가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는 대지예술가로서 입지가 확고하고, 그들의 작업은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 왔다.



포장된 개선문

©Christo

도심 속 건축과 예술, 뜨거운 감자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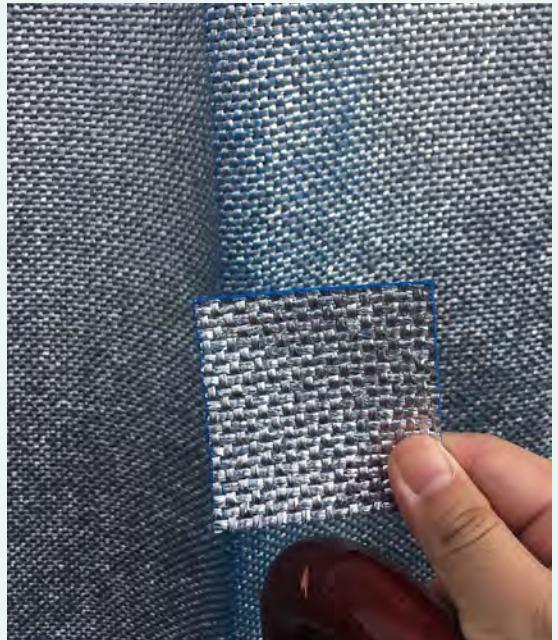
이번 설치에 있어서 파리에서 많은 논의가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시민을 비롯한 프랑스 국민이 개선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넋을 달래는 한편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 기록과 지휘관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다. 개선문 바로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무명용사들을 추모하는 무덤이 있는데, 절대로 꺼지지 않는 성화가 점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유·평등·박애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을 프랑스만의 방법으로 기리고 있으며, 개선문은 그 역사적 상징 중 하나이다.

설치가 발표된 이후 프랑스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을 천으로 ‘숨기려는 열망’을 드러낸 크리스토의 유작은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틴 켈리(Christine Kelly)는 포장된 개선문의 전시를 마치고 그 철거가 시작된 10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덮여 있던 개선문을 비꼬며) 나는 무호흡증에 걸려 있었다. 파리는 역사의 화려함을 되찾고 있다”라며 작품에 느꼈던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카를로 라티(Carlo Ratti)는 르몽드(Le Monde)의 칼럼을 통해 생태학적인 이유로 “개선문을 풀어 달라”라고 쓰기도 하였다. 환경적 관점 **에서 기념비를 포장하는 2만 5,000m²의 천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것이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과 정치인들 또한 프랑스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며 ‘고귀한’ 이미지를 파괴하려는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을 비난하면서 작품 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파리시청은 이 작업과 관련하여 작품 설치에 지불한 내역이 전혀 없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작품이 전시되는 날 “시민의 세금이 전혀 들지 않고 국가의 영향력에 기여하는 걸작”이라고 말하며 작가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 천 작업이 주가 되는 패션 산업은 이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물 생산 공정은 27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을 소비하는 맥락에서 2만 5,000m²의 직물을 만드는 데 드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포장된 개선문 작업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천(상)과 작품 설치 때부터 철거 때까지 꺼지지 않았던 추모공간의 불(하)

하나의 설치 미술이 도시에 던지는 메시지

비단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올해 9월 크리스토의 ‘포장된 개선문’이 전시되었다. 많은 시민이 직접 그의 작품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뜨거운 토론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전시 감상은 무료로 이루어졌으며, 주변 차량을 통제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를 진행하는 중에도 개선문을 향한 파리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듯, 재향군인협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프랑스를 위해 싸운 무명의 군인들과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불꽃을 다시 피우는 매일의 의식과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크리스토의 작업은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도시와 도심 속 건축유산을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매일 개선문을 스쳐 지나가는 파리시민들에게는 천으로 만들어진 실루엣으로 재정의된 도시의 풍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크리스토는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우리는 도시공간을 빌려서 며칠 동안 거기에 부드러운 변형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우

리는 건물과 풍경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도시에 던지는 그들의 메시지는 익숙함에 사라져 가는 도시의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국내의 시사점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스스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즉 현재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비록 그것이 짧고 실험적일지라도 변화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10년 전 런던의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피오나 라비(Fiona Raby)와 앤토니 던(Anthony Dunne)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크리스토가 사용하는 도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특히 관료주의나 정치 및 관습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거부하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필요하다.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건축과 관련이 있다. 더구나 도심 속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이번의 사례는



포장된 개선문을 직접 만지는 아이들(좌)과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는 파리시청(우)





포장된 개선문 외부(상)와 내부(하)

더욱이 건축과 도시의 서로 떼려야뗄 수 없는 관계를 상기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처럼 도심 속 건축물을 이용한 설치미술은 도시, 건축,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거나 편향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느끼며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의문과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도심 속 설치 예술’이 국내에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크리스토 & 잔클로드 홈페이지. <https://christojeanneclaude.net>
- 2 Capps, K. (2021.9.22.) In Paris, the Wrapped Arc de Triomphe Is a Polarizing Package. Bloomberg CityLab.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1-09-21/wrapped-arc-de-triomphe-delights-divides-paris>
- 3 Bacon, A. (2021.9.13.) L'Arc de Triomphe emballé par Christo divise les internautes. Sud Ouest. <https://www.sudouest.fr/france/l-arc-de-triomphe-emballé-par-christo-divise-les-internautes-5852509.php>
- 4 My, B., Rizhlaïne, F., Lauren,t P., Cécile, D., Graziella, L. (2021.10.3.) The Arc De Triomphe, Wrapped; Tribute to Christo, Goes Down This Sunday October 3. Sortir à Paris. <https://www.sortiraparis.com/arts-culture/exposure/articles/189145-the-arc-de-triomphe-wrapped-tribute-to-christo-goes-down-this-sunday-october-3/lang/en>
- 5 D'Angelo. (2021.10.4.) PHOTO Christine Kelly heureuse de retrouver l'Arc de Triomphe sans l'œuvre de Christo, elle fait réagir les internautes. Voici. <https://www.voici.fr/news-people/photo-christine-kelly-heureuse-de-retrouver-larc-de-triomphe-sans-loeuvre-de-christo-elle-fait-reagir-les-internautes-713881>

대만, 옛 철도노선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원 마련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286050/mecanoo-converts-former-urban-railway-line-into-green-corridor-in-taichung-taiwan>

<https://www.mecanoo.nl/Projects/project/220/Taichung-Green-Corridor>

대만 '타이중 녹색 회랑(Taichung Green Corridor)' 프로젝트는 대만 중부도시 타이중(Taichung) 시내를 가로지르는 길이 1.7km의 옛 철도노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프로젝트로,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Mecanoo와 현지 조경회사인 S.D. Atelier Design & Planning 등이 협업하였다.

2018년부터 약 3년간의 설계 및 시공을 거쳐 완성된 공원은 사용되지 않는 철도노선 부지와 제방 공간을 활용하여 철도의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기존에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특히 설계를 맡은 Mecanoo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선형 부지 내 도시재생, 시민 참여, 역사보존, 녹색 및 수자원,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순환 경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획과 설계요소를 담고자 하였다.

이에 철도노선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긴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은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녹색 회랑(Green Corridor)을 만들고, 허브 정원, 놀이터 등 충분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운동기구와 워터파크, 전망대 등을 구성하고 있다.



타이중 녹색 회랑

출처: Mecanoo 홈페이지. <https://www.mecanoo.nl/Projects/project/220/Taichung-Green-Corridor>(검색일: 2021.11.23.)

런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주택 개조 안내서 발간

<https://www.dezeen.com/2021/10/22/leti-climate-emergency-retrofit-guide/>

<https://www.leti.london/retrofit>

영국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런던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 (London Energy Transformation Initiative: LETI)는 탄소중립(net-zero)에 적합한 주택 개조 방법을 안내하는 ‘Climate Emergency Retrofit Guide’를 발행하였다.

영국의 연간 CO₂e* 배출량 중 18%는 2050년까지 완성될 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하는 주택의 80%가 건설되었다. 따라서 향후 30년 동안 매년 10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개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안내서는 100명 이상의 건축가와 엔지니어 및 건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언을 받았으며, 평균적인 영국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을 60~80% 절감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건물 보강 계획 및 LETI 개조 체계에 따라 건물의 상황에 맞춰 난방수요 및 에너지 사용 강도를 줄이며,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열펌프 등의 전기를 활용한 저탄소 대체제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 유형을 단독주택·아파트·중간테라스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특정 공간에 맞춘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건물 개조로 인한 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 습기 등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안한다.

한편 LETI는 향후 가정용 건물 외에 상업용 건물 등 비가정용 건물에 대한 안내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주택 개조 안내서

출처: LETI 홈페이지. <https://www.leti.london/retrofit>(검색일: 2021.11.25.)

*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가동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

콜로라도, 건설·건축자재에 허용 가능한 환경영향 기준 제시

<https://leg.colorado.gov/bills/HB21-1303>

<https://coloradosun.com/2021/10/08/embodied-carbon-labels-colorado-construction-materials>

<https://rmi.org/colorado-passes-embodied-carbon-legislation/>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건설·건축자재에 명확한 환경영향 기준을 설정하는 'Buy Clean Colorado Act'를 시행한다.

이 법에 따르면 콜로라도 건축국(Office of The State Architect)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공공건축, 도로 등 공공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자재별로 허용 가능한 환경영향 정도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허용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자재는 아스팔트·시멘트·유리·강화스틸 등이며, 그 수치는 각 자재에 대해 공인된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데이터베이스와 평균 수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콜로라도 건축국과 교통부는 공공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4년마다, 공공 인프라 자재는 2027년부터 4년마다 허용 수치가 적절한지 검토해 조정하게 되나 '수치를 상향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공건축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공공 인프라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기준일 이후 콜로라도 건축국과 교통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의 계약자는 법에 명시된 자재에 대해 EPD를 제출해야 한다. EPD 제출 전에 계약자는 사업에 해당 자재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명시된 자재의 EPD 제출이 불가능한 일부의 경우, 계약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EPD 제출이 가능한 대체 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콜로라도 선(The Colorado Sun)>은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마치 식품에 나트륨, 당류, 지방 등 영향성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 2050년까지 90% 줄이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의 EPD 라벨

출처: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홈페이지. <https://living-future.org/declare/declare-about/#declare-2-0>(검색일: 2021.12.8.)

밴쿠버, 공공임대주택의 빠른 공급 위해 허가 절차 개선

<https://vancouver.ca/news-calendar/ground-breaking-improvement-from-the-city-will-help-build-social-and-rental-housing-faster.aspx>

<https://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addressing-the-permit-backlog.aspx>

<https://vancouver.ca/news-calendar/additional-cuts-to-permitting-red-tape-supports-business-recovery.aspx>

캐나다 밴쿠버시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밴쿠버 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건축·개발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행정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2021년 봄에 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허가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도시·관리 TF를 설립하였으며, 6월에는 주택 건축 허가에 걸리는 시간 중 1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개선안을 승인하였다.

이어 9월에는 공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과 필수 인프라, 문화시설에 대해 빠른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공공주택(Social housing) ▲안전한 임대주택(Secured market rental housing) ▲예술가 스튜디오, 커뮤니티센터, 공동체주택(Neighbourhood house),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보육시설이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개발, 건축 프로젝트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사와 참여 기업의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는 ▲허가에 드는 비용 절감 ▲기업의 상업공간 이용 및 개선에 유연성 부여 ▲허가 절차 중 3,800주 절약을 목표로 용도변경 등 절차 축소, 온라인 허가신청 활성화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임대주택

출처: 밴쿠버시 홈페이지. <https://vancouver.ca/news-calendar/ground-breaking-improvement-from-the-city-will-help-build-social-and-rental-housing-faster.aspx>

국토교통부,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10.20.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5, 기초 226)
근거	「건축법」 제78조 제4항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②건축 관련 안전관리 ③유지·관리의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 노력
방법	내·외부 전문가(내부 1, 외부 4)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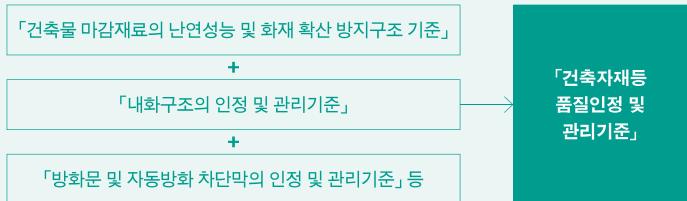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일반 부문의 경우 올해 최우수 지자체에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상남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되었다. 또 대구광역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별 부문은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 사례’를 공모한 결과로, 총 16개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강원도와 동해시를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한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해시는 ‘망상해변 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와 운영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화재안전 성능 높이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1.9.17.

국토교통부는 내화구조·마감재료·방화문과 자동방화 차단막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품질인정제도)」을 확대하고자 지난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12월 23일에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공학 전문가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왔다. 특히 2020년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 및 ‘건축법’ 개정을 통해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서 유통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 차단막,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고 품질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여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2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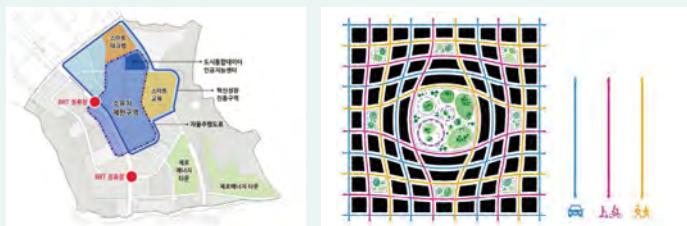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자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구조

- ① 도시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간서비스
- ②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운영
- ③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혁신공간 조성
- ④ 지자체·기업·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

이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끈다. 또 지역별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조성되는 혁신공간은 스마트시티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으로, 정부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계획 특화방안(예시)



세종 국가시범도시

소유차 제한구역 설정, 간선급행버스(BRT)와 자율주행셔틀 노선 지정 등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전국 (인공) 지능화 시동, 지역거점 지능형 도시 조성 추진. 11월 8일 보도자료.

일본 도요타 우븐시티

목적별로 지상도로(자율차, 보행자, PM 등)
3종류 도로)와 지하도로(화물 전용도로) 조성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16개소를 조성하는데,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공모계획은 지난 11월 8일 공개되었으며, 12월 초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 대응책 마련

대구시 건축주택과 지역건축안전팀
2021.10.19

광주시 안전정책관 안전산업팀
2021.10.28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1.10.29

대구시,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시책 마련

대구시가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자 '해체 공사장 안전·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르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체 공사장 전체에 대한 해체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구·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체 공사장의 환경 관리를 위해 인허가 시 준수사항으로 해체 대상 사업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가설 울타리를 조기 설치할 것과 이에 대한 디자인 표식 활용도 명시하였다. 또 해체계획 이행 여부와 감리의 근무 실태 수시 점검, 해체허가(신고) 처리 여부와 관계자의 현장 관리 실태 확인, 해체공사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 및 철거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광주시, 철거 건축물 이상징후 포착 시스템 개발 추진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3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공모 사업'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해체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레이저 센서와 3D 스캐닝 등의 기술을 활용해 해체 진행 중인 건축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알려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국비 5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처럼 구조물의 변형이나 이상징후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가정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서울시가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차 피해로 인근 주택가 정전 등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시는 실제 발생하였던 붕괴사고 사례를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유사시 적응력을 높이고, 시 차원의 수습체계를 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훈련은 영상시스템을 통한 ▲초기대응훈련(상황판단회의 및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요쟁점 토론(실무반별 주요쟁점 토론 등) ▲집중토론(붕괴사고에 따른 대책 등)과 이동형 3D 가상재난환경을 이용한 현장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대응훈련 시뮬레이션 영상

출처: 서울시. (2021). 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가정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10월 29일 보도자료.

장소 만들기를 위한 플랫폼, Architecture & Design Scotland

임정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도시계획 박사과정

들어가며

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인 Architecture & Design Scotland(A&DS)는 '디자인은 협동의 과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좋은 공간과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스코틀랜드 정부는 '장소 원칙(Place Principle)'을 발표하면서 주요 기관들이 미래를 향한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회복, 기후변화, 불평등, 시민들의 복지 등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A&DS가 추구하는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A&DS의 주요 활동과 함께 이 기관이 공간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어떻게 스코틀랜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지 살펴보자 한다.

기관 소개

A&DS는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스코틀랜드 정부가 2005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비(非)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 장소 만들기와 건축·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부기관 및 부처, 지방정부,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업하며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스코틀랜드의 공간 조성을 위해 '그 장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는 A&DS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협업과 공유의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과 공간을 위한 스코틀랜드의 정책인 '장소 만들기(Creating Places)*에 따르면 A&DS는 대중을 위한 전시나 이벤트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조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의 질의에 응대, 자원 및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건조 및 자연환경과 관련한 여러 부처

* 스코틀랜드 웹아카이브. <https://www.webarchive.org.uk/wayback/archive/20170701031057/http://www.creatingplacesscotland.org/about-us>

“A&DS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스코틀랜드의
공간 조성을 위해
‘그 장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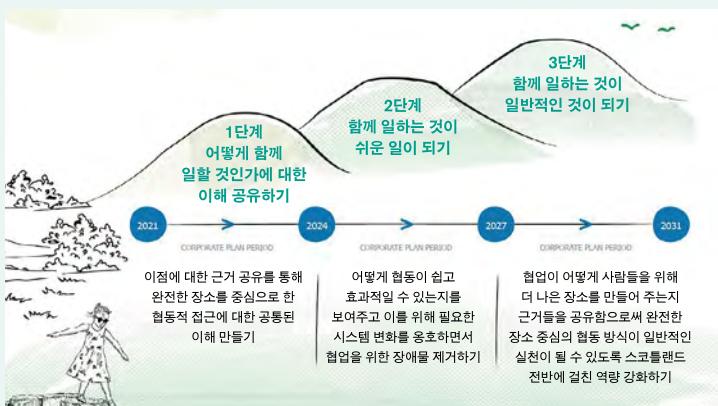
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면서 기관의 역량과 다양성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관 운영

A&DS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관의 역할과 전략을 담은 ‘기관 전략계획(Corporate Strategy)’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한 실행계획인 ‘기관 활동계획(Corporate Plan)’을 3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지자체 도시계획 부처, 전략적 개발계획 담당기관, 주요 공공기관 및 스코틀랜드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획 성과 체계(Planning Performance Framework)*’에 따라 기관의 활동성과를 매년 보고하고 평가받고 있다. 2020년 수립한 기관 10개년 전략계획(2021~2031)에 따르면 1단계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공유하기’, 2단계 ‘함께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되기’, 3단계 ‘함께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제시한다. 현재 1단계 시작점에 있으며, 완전한 하나의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와 근거들을 모으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A&DS 연간 성과보고서(Planning Performance Framework)에 따르면, 기관의 주요 활동목표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그리고 서비스 제공(Service)으로 구분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A&DS는 2020~2021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표별 활동 항목들은 성과평가 지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DS 10개년 전략계획 타임라인

출처: A&SD(2020a, p.17)

* Planning Performance Framework 보고서는 양적·질적 성과지표와 함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3개 등급(red, amber, and green)으로 제시하고 있다.

“A&DS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장소 만들기(Placemaking)

-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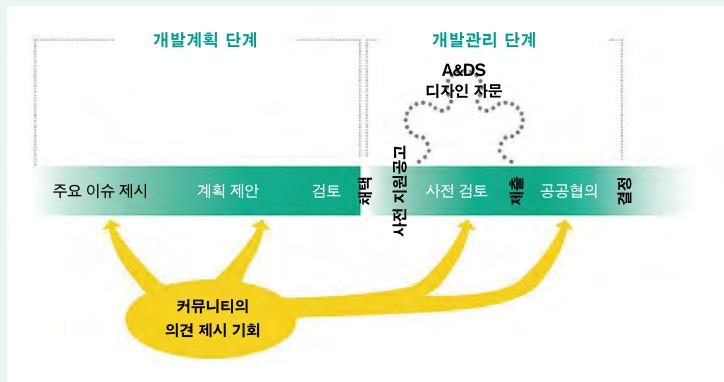
A&DS는 디자인 관련 지원 및 자문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 및 디자인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전략적 장소 만들기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계획수립과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스코틀랜드의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020~2021년에는 장소 중심의 보고(Place-Based Briefing), 장소 기준(Place Standard), 도심의 삶(Town Centre Living), 탈탄소를 위한 장소계획(Place Planning for Decarbonation)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국가적 어젠다와 관련한 공간계획 방식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 지역발전계획 참여(Local Development Plan Engagement)

A&DS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계획주체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간의 질과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는 데 있어 기관에서 제시하는 계획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디자인 자문, 워크숍 지원,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 전략계획의 지역 적용 방안을 검토하거나 법정 지역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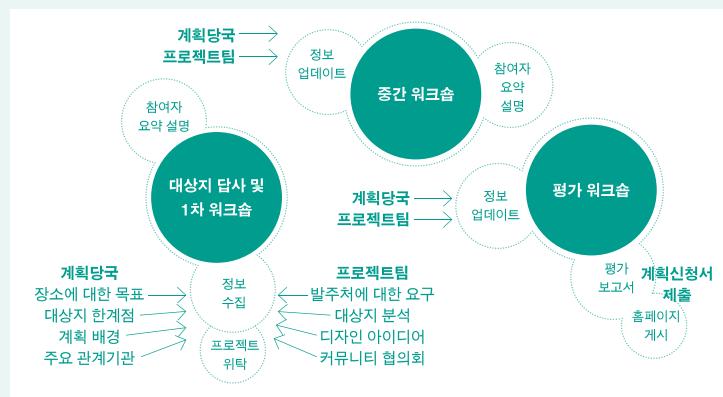
- 사전 개발계획 지원(Pre-Application Collaboration)

이와 더불어 A&DS는 계획 심의 이전 단계에서 계획당국과 협업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건강·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디자인 자문에 응대하고 있으며,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에 제안되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모든 프로젝트는 A&DS가 참여하는 디자인 평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0~2021년에는 농촌지역관광 인프라 보조금 사업(Rural Tourism Infrastructure Fund)과 사회주택 녹색 인프라 지원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커뮤니티 주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디자인 자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발계획 과정과 A&DS 디자인 자문 시점

출처: A&DS. Making Better Places: Design Advice. 1.

**A&DS 디자인 자문 워크숍 절차**

출처: A&DS. Making Better Places: Design Advice. 2.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우수사례 공유(Sharing Good Practice)

A&DS는 이벤트, 보고서 발간, 홍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계획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공공부문 발주자 포럼(Public Sector Client Forum)’은 공공부문 내의 디자인 관련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며 디자인 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포럼 운영은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이를 위한 발주자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지식과 경험 축적, 주요 그룹 내 역량강화 지원, 새로운 교류와 네트워크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지역 디자인 검토 패널(Local Design Review Panel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언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행사 기획 및 운영, 뉴스레터 및 요약자료(briefing materials)를 통한 정보 제공, 다른 디자인 패널들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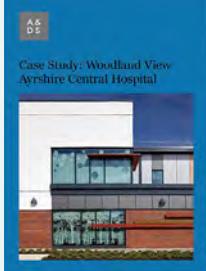
서비스 제공(Service)

A&DS는 그 외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 지원, 학생 건축상 전시 및 지원, 디자인 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왕립건축가협회(Royal Incorporation of Architects in Scotland)와 함께 진행하는 학생 건축상은 단순히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건축교육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이 스코틀랜드의 미래 건축가들의 창의성과 비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A&DS 홈페이지. https://www.ads.org.uk/publicsector_clientforum/

** A&DS 홈페이지. https://www.ads.org.uk/design_review_localpanels/

*** RIAS 홈페이지. <https://www.rias.org.uk/for-students/student-awards>



A&DS 사례집 발간물 예시

출처: A&DS 홈페이지. <https://www.ads.org.uk/>

최근 주요 프로젝트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한 디자인: 탄소를 고려한 장소 만들기

(Designing for a changing climate: creating carbon conscious places)

2019년 스코틀랜드 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의회(Energy and Climate Change Directorate)’는 스코틀랜드의 기후변화 플랜과 법(Climate Change Plan and Act)을 지역 단위에서 적용하고자 A&DS에 실행 방안 구축 및 운영을 요청하였다. A&DS는 스코틀랜드 내 4개 지역 *을 선정하여 1년간 해당 지자체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A&DS, 2020b).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축한 경험과 지식들을 반영하여 ‘탄소를 고려하는 장소의 여덟 가지 원칙(8 Principles of a Carbon Conscious Place)’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계획들을 추진할 경우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네 가지 장소 유형 **으로 제시하였다(A&DS, 2020c).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단위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사례와 원칙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별 조건, 탄소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DS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스코틀랜드 정부 도시계획 및 건축부처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제도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 수립 내용 그리고 국가 도시계획틀(National Planning Framework)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A&DS, 2020d). 특히 수립 과정과 관련하여 ‘20분 마을계획(20-Minute Neighbourhood)’ 적용을 비롯하여 ‘협업(Collaboration)’, ‘시나리오 계획 기법(Scenario Planning Technique)’, ‘커뮤니티 참여(Community Engagement)’, ‘근거 수집(Evidence Gathering)’, ‘기술 개발(Skills Development)’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일럿 프로젝트에 이어 A&DS는 2020년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발표한 ‘스코틀랜드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후 행동 마을(Climate Action Town)’ 프로젝트를 2022년 3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 행동 마을 프로젝트는 기후 행동 관련 활동 참여, 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론의 개발, 경감·적응·행동변화 등을 통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행동이 비교적 미미했던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A&DS는

탄소를 고려하는 장소의 여덟 가지 원칙(8 Principles of a Carbon Conscious Place)

1. 장소 중심의 접근(Place-led approach)
2. 가까운 거리의 장소(Place of small distance)
3. 가까운 거리의 장소들 간의 네트워크(Network of small distance places)
4. 지역주민을 위한 그리고 함께 디자인되는 장소(Place designed for and with local people)
5. 재사용 및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전체 생애비용을 고려하는 장소
(Place that reuses, repurposes and considers whole life costs)
6. 전체 그리고 순환 시스템을 가진 장소(Place with whole and circular systems)
7. 공유를 지원하는 장소(Place that supports sharing)
8. 시간 내 디자인되는 장소(Place designed in time)

“정부 소속 전문가 조직으로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고, 이것들이 쌓여 스코틀랜드 전반의 건축과 도시계획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 위기의 적응, 회복력 있는 식량 네트워크, 장소계획을 통한 20분 마을 개념의 적용,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한 연료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A&DS에서 운영하는 공공 부문 밭주처 포럼 및 지역 도시디자인 포럼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위한 논의와 경험 공유를 촉진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가며

A&DS는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의 장소 안에서 모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토지, 건축물을 위한 계획 및 프로젝트에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접근 방식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A&DS는 국가적 어젠다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의 장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과 지식을 생산해 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되고 논의되면서 스코틀랜드 디자인 분야에서의 지식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정부 소속의 전문가 조직으로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장소 만들기에 포함된 다양한 관계자 및 자체 계획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수한 사례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이것들이 쌓여 스코틀랜드 전반의 건축과 도시계획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현재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Lerwick, Elgin, Strathard, Glasgow

** 도시 주거지, 도시 중심지, 마을, 농촌 커뮤니티

*** A&DS 홈페이지. <https://www.ads.org.uk/introducing-climate-action-towns/>

참고문헌

- 1 A&DS. Making Better Places: Design Advice. <https://www.ads.org.uk/wp-content/uploads/Leaflet1LayoutV0.2.pdf>
- 2 A&DS. (2020a) Corporate Strategy 2021-31. <https://www.ads.org.uk/wp-content/uploads/ADS-Corporate-Strategy-2021-31.pdf>
- 3 A&DS. (2020b). Designing for a Changing Climate: Place Planning for Decarbonisation - Pilot Reflections. <https://www.ads.org.uk/wp-content/uploads/Place-Planning-for-Decarbonisation-Pilot-Reflections.pdf>
- 4 A&DS. (2020c). Designing for a Changing Climate: Carbon Conscious Places. <https://www.ads.org.uk/wp-content/uploads/Carbon-Conscious-Places-Main-Report.pdf>
- 5 A&DS. (2020d). Designing for a Changing Climate: Planning Reform. <https://www.ads.org.uk/wp-content/uploads/Designing-for-a-Changing-Climate-Planning-Reform.pdf>
- 6 A&DS 홈페이지. <https://www.ads.org.uk/>
- 7 RIAS 홈페이지. <https://www.rias.org.uk/>
- 8 스코틀랜드 웹아카이브. <https://www.webarchive.org.uk>

건축과 도시공간

—

Vol. 44

Winter 2021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 추억 하나쯤 품고 있는 동네공원 위에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공간이 들어섰다. ‘놀이터’ 대신 ‘숲’이라는 이름을 단 이 공간은 자연의 다채로운 풍경과 한계 없는 상상력, 이야기와 소통으로 지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높고 두터운 담장을 내리고 국민 앞에 섰다. 북촌로변으로 새로 들어선 헌법재판소 별관은 누구나 문을 두드리고 머물 수 있는 도서관, 북카페, 옥상정원으로 채워졌다. 이제 사방으로 열려 우리를 맞이하는 이곳은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떠올려볼 수 있도록 한다.

밀정속&하우스



담장이 사라진 힐明媚체인스 벌관



기억 위에
새 동심을 채우다
- 맘껏숲&하우스
096

권위의 장벽을 내리고
소통의 장을 세우다
- 헌법재판소 별관
112

기억 위에 새 동심을 채우다 – 맘껏숲&하우스 | 맘껏숲이라는 이름은 아름드리 개잎갈나무와 대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나무와 숲, 그리고 연꽃 호수리는 풍성한 자연이 놀이를 담는 그릇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 도시의 모든 곳이 놀이터가 될 수 있으니, 놀이터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맘껏 놀 수 있는 숲이 생긴다는 건 더 풍부한 상상과 가능성 을 의미했다.

권위의 장벽을 내리고 소통의 장을 세우다 - 헌법재판소 별관 | 권위 의 상징이었던 헌법재판소는 보안을 이유로 높고 두꺼운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굳건하던 담장을 허물고 가려져 있던 낯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로 가까이에 별관을 새로 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별관의 도서관, 민원실, 북카페, 옥상정원, 전시실 등을 누 구든 이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

맘껏숲 & 하우스

기억 위에 새 동심을 채우다

개요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6-11
용도	근린공원(맘껏숲), 제1종 근린생활시설(맘껏하우스)
대지면적	4,684.18m ²
건축주	전주시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맘껏숲

프로젝트 총괄 및 책임디자이너	김아연
맘껏숲 기본계획	윤승렬, 이현정, 이재영, 조경준, 조찬희, 김현민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스튜디오일공일(김현민, 이현옥, 이세희, 이슬기, 최담희)
조경 시공	(주)호원건설
맘껏아이지트	한국환경교육연구소(이재영, 조경준, 심규태, 조찬희), 야호학교 청소년 및 퇴움교사
트리하우스	미즈노 마사유키, 가사골 교육놀이공동체
목재시설물 시공	(주)쎄즈믄
미끄럼틀 시공	(주)자인
외부 전기 시공	대아전력공사
설계기간	2018. 3. ~ 2019. 12.
시공기간	2020. 1. ~ 2021. 5.

맘껏하우스

건축면적	146.73m ²
연면적	178.52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8.55m
건폐율	3.13%
용적률	3.8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시너지구조
설계	김현, 최정인
시공	태왕종합건설(주)
기계·전기설계	(주)대화
설계기간	2018. 10. ~ 2019. 10.
시공기간	2020. 1. ~ 2020. 11.



맘껏숲과 맘껏하우스



자연 속 맑겟숲 공간



© 김아연



© 김아연



상 놀이워크숍
하 도토리숲 만들기 활동 모습



상 맘겟하우스 진입로
하 맘겟하우스 외부 통로



상 목재와 석재의 조화가 돋보이는 외관
하·좌 맘껏하우스에서 보이는 맘껏숲
하·우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공간감





좌 맑껏숲과 방문객들

좌·상 맑겟하우스를 이루는 '틈'
좌·하 맑겟하우스 내부
우 맑겟숲과 하우스를 잇는 무지개다리

환경교육과 놀이전문가가 포함된 설계팀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아동자문단과의 놀이워크숍, 숲에서 놀아 보는 팝업놀이터, 직접 디자인하여 시공하는 아지트 만들기, 도토리의 새싹을 틔워 만드는 도토리 텃밭 만들기 등 현재 맘껏숲에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테스트하며 콘텐츠를 만들어나갔다.

©일상건축사사무소



밤에 본 맘껏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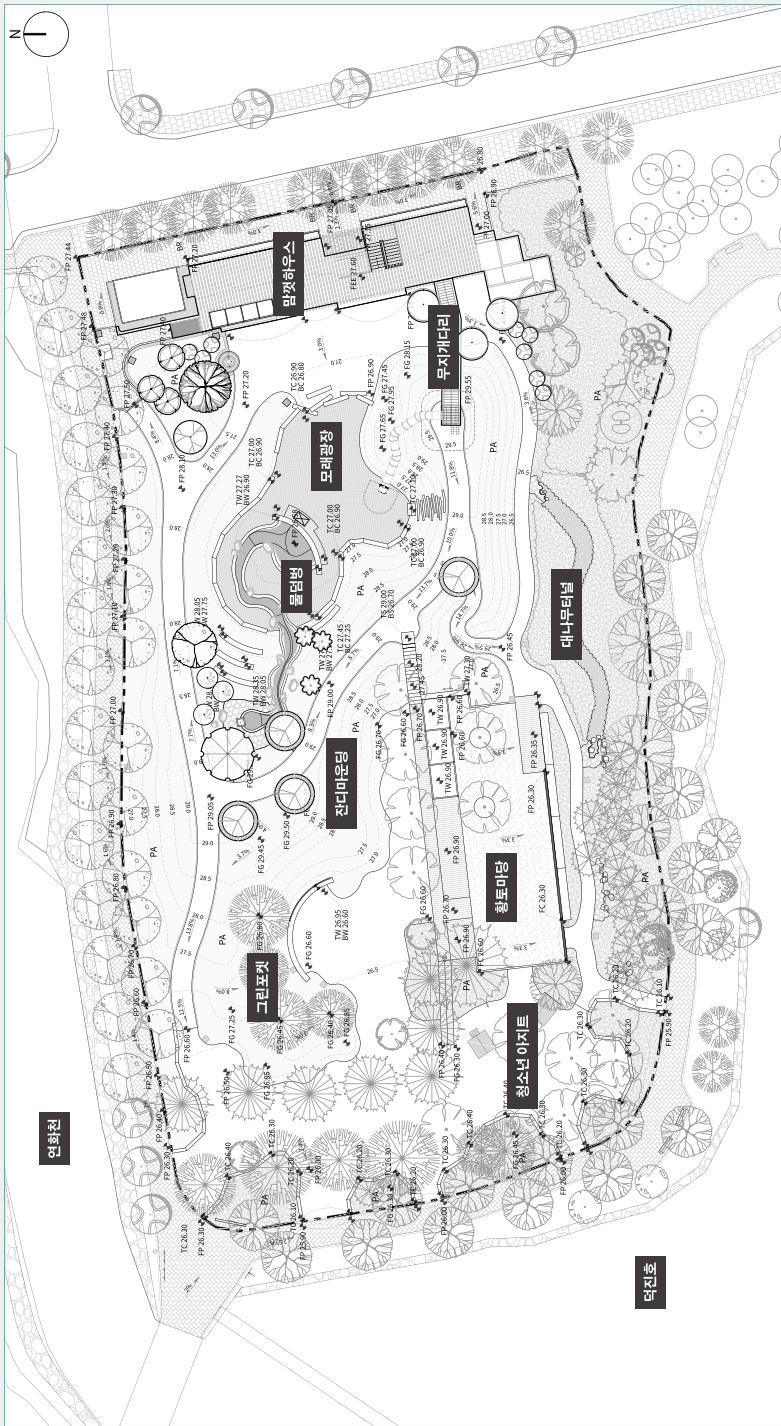
맘껏, 놀이를 기획하다

유니세프(Unicef)가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는 도시를 만드는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맘껏숲&하우스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매칭펀드로 조성한 아동친화공간이다. 어른 혹은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맘껏 스스로 즐기자는 의미로 시작한 ‘맘껏’ 공간은 서울의 맘껏놀이터(2017), 군산의 맘껏광장과 맘껏카페(2019)에 이어 전주의 맘껏숲 & 하우스가 세 번째다. 덕진공원 어귀에 위치한 맘껏숲 & 하우스는 옛 야외수영장 부지에 만들어진 놀이 복합공간으로 전주 시민이라면 한번쯤 이 곳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 이미 놀이의 기억이 두껍게 쌓여 있는 장소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공원과 놀이터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놀이터의 주 이용자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설계팀의 생각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청소년들이 모이면 우범화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우리는 다양한 발언과 참여의 기회를 통해 상충되는 의견들을 조율하며 공간의 정체성을 함께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환경교육과 놀이전문가가 포함된 설계팀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아동자문단과의 놀이워크숍, 숲에서 놀아 보는 팝업놀이터, 직접 디자인하여 시공하는 아지트 만들기, 도토리의 새싹을 틔워 만드는 도토리 텃밭 만들기 등 현재 맘껏숲에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테스트하며 콘텐츠를 만들어나갔다. 당시 수년간 경험을 통해 어린이놀이터가 적절한 실내 공간과 연계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던 터라, 맘껏숲에도 바깥놀이터와 이어지는 적절한 실내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날씨에 상관 없이 놀거나 쉴 수 있는 공간, 보호자가 아이들을 지켜 볼 수 있는 공간, 운영자가 상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절실했다. 건축물 없는 놀이



상
종·하
맘껏숲과 맘껏하우스
맘껏숲과 방문객들



만금숲 배치도

① 그림과 도면

터 사업이었지만 기본계획안에 박스 형태의 건축물을 그려 넣어 시장님께 놀이터와 연계된 실내공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다. 그 제안에 공감한 전주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렇게 맘껏숲에 들어설 맘껏하우스가 탄생하였다. 전주와 덕진공원에 대한 기억과 애착을 가진 지역 건축가가 맡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실현되어 지금의 맘껏하우스 풍경으로 이어졌다. 맘껏숲&하우스는 운영 측면에서도 새로운 공공놀이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전주시의 아동·청소년 정책 '야호 프로젝트'의 하나인 맘껏숲&하우스는 놀이활동가가 상주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놀이터이다.

맘껏, 자연에서 놀다

맘껏숲이라는 이름은 아름드리 개잎갈나무와 대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나무와 숲, 그리고 연꽃 호수라는 풍성한 자연이 놀이를 담는 그릇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 도시의 모든 곳이 놀이터가 될 수 있으니, 놀이터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맘껏 놀 수 있는 숲이 생긴다는건 더 풍부한 상상과 가능성을 의미했다.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 어느 정도의 영역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원형 언덕의 능선을 기준으로 맘껏하우스가 있는 놀이터는 주로 어린이 놀이 영역, 호수 쪽이 청소년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영역으로 계획하였지만 공간 구분은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구조이다. 놀이에서는 다양성과 연속성, 자발성이 중요하다. 건축물과 놀이터가 이어져 높낮이가 있는 잔디 언덕, 순환 동선과 작은 샷길이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데, 어른들이 만들어

◎
길이모



상 놀이워크숍
하 도토리숲 만들기 활동 모습

◎
스튜디오일정일



맘껏숲



상 모래광장
하 물덤벙

놓은 공간 구분과 규칙을 허물거나 넘나들며 아이들은 놀이를 발명 할 것이다. 슬라이딩 가벽에는 청소년들이 커버댄스나 다양한 활동 을 하는데 필요한 거울과 낙서벽이 설치되어있고, 동시에 덕진공원 의 호수를 조망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대나무숲 터널은 이미 있던 대나무숲 안에 작은 길을 낸 것이다. 맘껏 아지트는 청소년들이 디자인하여 직접 제작까지 한 구조물을 존치시킨 것이고 트리하우 스는 별도의 예산으로 솜씨 좋은 목수들이 만들었다. 놀이워크숍 때 시도한 밧줄 놀이시설 등도 준공 이후 추가 설치되었는데, 좋은 공 간은 이렇게 진화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한다. 놀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놀이터를 생각할 때 학교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놀이터 풍경을 지배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인증제도이다. 놀이와 도전의 가치가 상실되고 안전 만 강조되는 제도적 구속은 조합놀이대 중심의 틀에 박힌 놀이터를 양산하고 있다. 조합놀이대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정해진 패턴으로 놀고 사고한다. 맘껏숲에는 대신 언덕, 개울과 물웅덩이, 나무, 나무 토막, 흙, 놀이집, 낙서벽, 거울 등 놀이시설뿐 아니라 놀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여기서 아이들은 스스로 놀거리 찾고 노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어른 눈에 재미없어 보여도 아이들은 이것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그걸 깨 달을 때까지 어른들이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좋은 공간을 제공해줘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안전은 놀이의 가치와 놀이에 있어서 안전과 도전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맘껏숲&하우스가 우리 사회의 놀이와 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건축물이 아닌 놀이공간

덕진공원은 필자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러가던 전주의 대표적인 쉼터였으며, 딸 셋의 아빠가 된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찾는 곳이 되었다.

대지는 전주의 중심공원인 덕진공원의 일부이다. 덕진공원 야외수영장은 1973년부터 2001년까지 약 30년간 운영이 되었고, 그 때 당시 전주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놀러와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수영장이 없어지고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이곳에 다시금 전주의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를 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건축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심은 놀이 터이고 공원이고 조경이었으면 했다. 그렇기에 맘껏 하우스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놀이공간 정도로 인식되길 원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기억을 더듬어보면 비석치기, 땅따먹기, 두꺼비집짓기 등 흙, 돌, 나무 같은 자연물을 가지고 놀았다. 최대한



상·하 맘껏하우스



공사 전 현장



맡겼하우스 배치도

© 일상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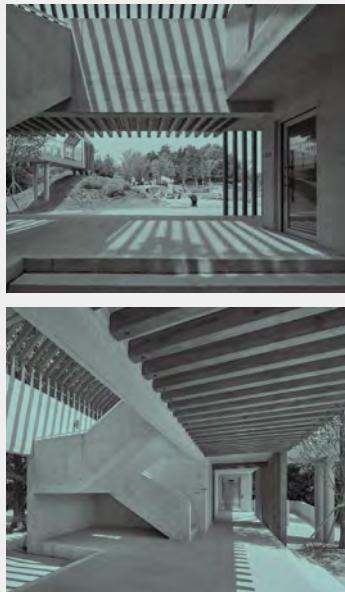
건축물을 구성하는 마감 요소들도 이들과 결이 같기를 바랐다. 하나의 놀이공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목재(글루램), 노출 콘크리트, 석재가 마감을 이루게 되었다.

틈과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다

놀이 공간을 만드는 건축적 장치는 틈과 프레임이다.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실내공간만을 넣으면서 실내로 규정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와는 반대로 외부공간과 사이공간 즉 ‘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틈은 때로는 이동에 쓰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머물 수 있는 부피가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혹은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시야 또는 음향이 통과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틈을 만들어준 것은 아이들이 일방향으로, 규정된 대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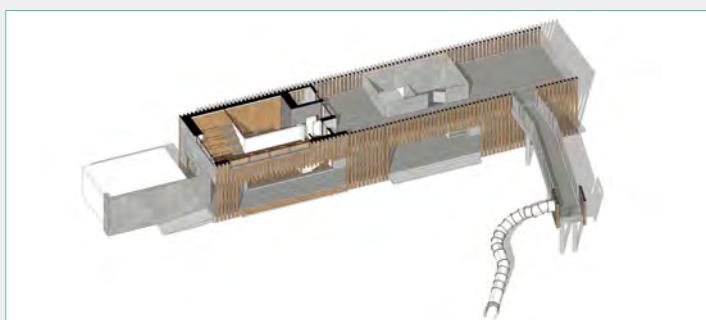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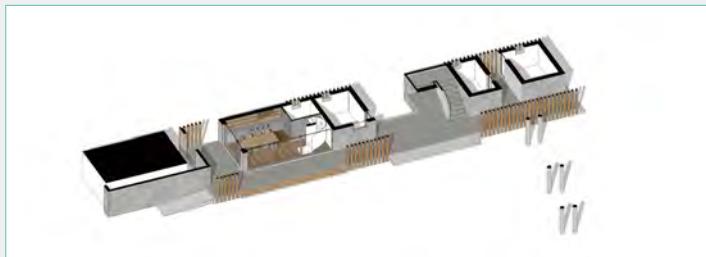
변화하는 박공 목재 프레임(글루램)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규정짓고 공간감을 갖게 하였다. 프레임은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전을 위한 난간 역할을 하며, 각종 놀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지대의 역할을 한다. 그네, 집라인 등 놀이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담고자 했던 목표다.

©일상건축사사무소



상 하 맘껏하우스에서 보이는 맘껏숲
하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공간감

©일상건축사사무소



맘껏하우스 1층(상)과 2층(하) 아이소메트릭

헌법재판소 별관

권위의
장벽을 내리고
소통의 장을 세우다

김복지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장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번지)
용도	공공업무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6,808.60m ²
건축면적	1,362.21m ² (별관)
연면적	7,593.92m ² (별관)
규모	지하 3층, 지상 2층
높이	11.86m
건폐율	8.10%
용적률	15.0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	김복지, 김동욱a(유선), 김동욱b(현신)
설계담당	이진나, 박종현, 이동주(유선), 박유선(현신)
유구전시관 자문	안창모(경기대)
시공	성도토건(주)
설계기간	2015. 10.~2017. 9.
시공기간	2017. 12.~2020. 4.
공사비	약 199억 원
건축주	헌법재판소



© Yoon, Jeon hwan

담장이 사라진 헌법재판소 별관



'팀장을 허물고 국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 헌법재판소



©현법재판소



©윤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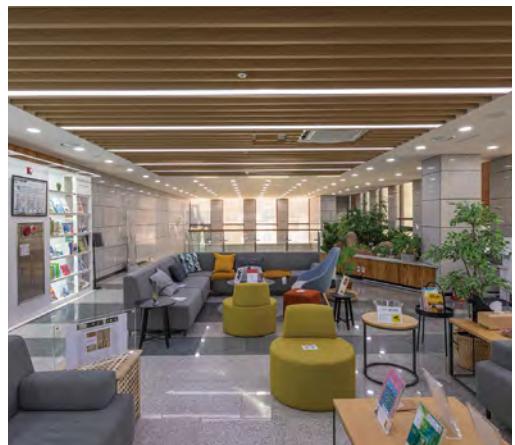
©윤준환

상 북측 전경
하 북촌로변 전경



© Moon Joonhwan

상 별관 1층 주출입구
하 옥상정원



상 지하 1층 전시실
하 · 좌 1층 도서관
하 · 우 1층 복카페

권위의 상징이었던 헌법재판소는 보안을 이유로
높고 두꺼운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굳건하던 담장을 허물고 가려져 있던 낮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로 가까이에 별관을 새로 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별관의 도서관, 민원실, 북카페, 옥상정원, 전시실 등을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

© 레이저한



유구전시관

헌법재판소와 탈권위적 공공건축

한국 사회에서 법치의 상징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모두 그 위상을 실감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생각만큼 길지 않다. 198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던 때였다. 1993년에 지금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낸 헌법재판소는 질서정연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건축으로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었다. 법령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지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법 위의 법’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건물 역시 합리적이고, 엄정하고, 냉철한 이미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의미를 드러낸다.

시간의 흐름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헌법재판소는 보안을 이유로 높고 두꺼운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굳건하던 담장을 허물고 가려져 있던 낮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로 가까이에 별관을 새로 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별관의 도서관, 민원실, 북카페, 옥상정원, 전시실 등을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국내 최대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 법률 관련 자료 등 약 16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연구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시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알리면서 우리 삶에서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민원실은 접근성을 높였다.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던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개방적인 공간, 누구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탈권위적 공공건축의 사례가 되고 있다.

두 가지 난관

별관을 설계하면서 무엇보다 본관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새로 들어서는 별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본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도록 구상하고, 별관이 본관을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배치했다. 기본적으로 본관이 주역, 별관이 조역으로 보이도록 했다. 더불어 소규모 저층 주거지인 북촌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부피를 작게 만들었다. 또한 본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 만큼 본관의 이중 복도(double corridor) 동선을 1층과 지하 1층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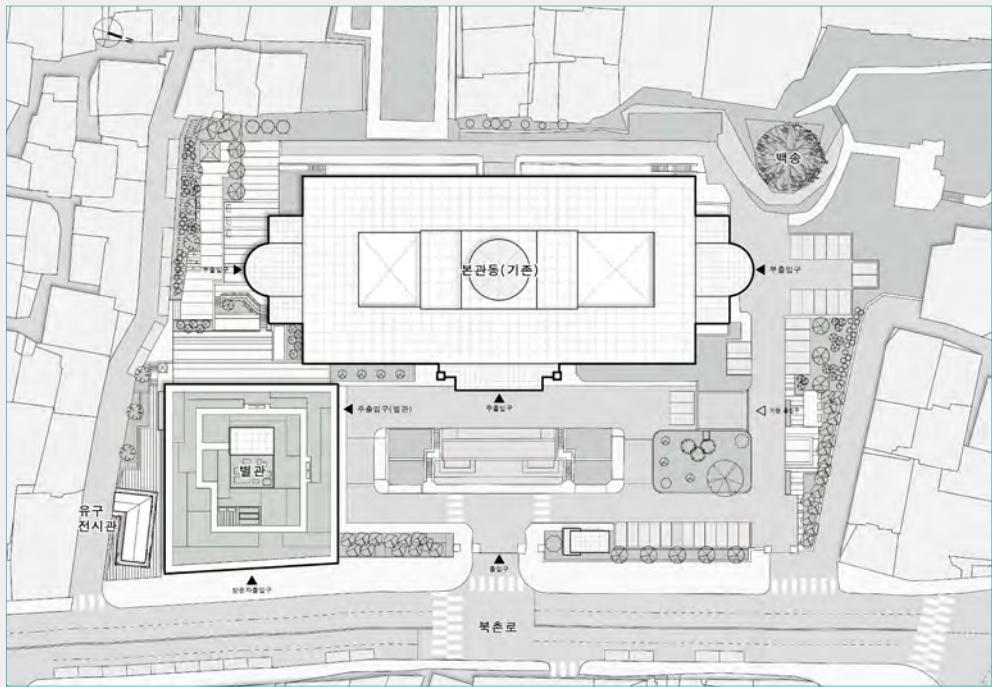
③ 헌법재판소



상 1980년 전경

중 2000년 전경

하 2020년 전경



배치도



조감도(현상설계안)

그러나 본관의 위상을 최대한 존중하고, 본관과 별관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려고 한 의도는 처음 실행할 때부터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 현황 측량 결과 별관이 들어설 장소의 폭이 당초 자료보다 5m 이상 좁았다. 이로 인해 본관 남측에 두려 한 연결공간이 1층과 지하 1층에서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는 본관과의 다각적인 연계 동선 구축, 본관과의 간섭 최소화 등 당초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었고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이 16m 이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구청의 높이 제한 강화 침침에 따라 12m 이하로 낮아지면서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층수 변경을 넘어서서 연관관계의 변경이 수반되기에, 또다시 본관과의 연계기능과 동선 모두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 결과 바닥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져야 했지만, 본관과 연계하면서 외부와 소통하려는 원안의 주요 의도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관과 별관의 기능 연계

본관 5층 도서관의 수장고가 넘치고, 사무공간의 부족을 해소해야 하는 기능적 필요에 따라 도서관을 이동 배치하고, 민원실 등 업무공간을 확충하면서 기존 주차장과 연계하는 게 별관의 주요 기능이 됐다.

본관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본관과 별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외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층별 구성과 영역 구분이 중요했다.

본관 1층에는 법정과 강당 등 공용시설이 있고, 2층부터는 업무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직원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 1층에서는 외부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에서는 연결 복도와 주차장을 통해 본관과 별관이 연계된다. 외부 방문객은 북촌로변에서 지하 1층으로 직접 출입하게 돼 지하 1층이 동선 연계의 핵심공간이 된다. 외부 방문객 동선과 본관으로부터 연결된 내부 직원의 동선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별관의 지상 2개 층이 도서실이고, 지하에는 보존서고와 주차장이 배치돼 상부층과 원활한 기능 연계를 이룬다.

① 북측 전경



상 북측 전경
하 북촌로변 전경



①
한국법원
박물관



상 1층 도서관
중 1층 북카페
하 지하 1층 전시실

개방을 통한 주변 환경과 관계 맺기

헌법재판소 별관은 중앙 코어를 두고 4면을 개방하는 형태로 각기 다른 주변 환경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먼저 동측은 주도로에 대면하여 북촌을 오가는 보행자와 방문객을 맞는다. 지하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전시실과 민원접수실이 배치되고, 그 안쪽으로 직원 업무실과 다목적실 등 본관과 연계한 공간들이 자리한다. 여기서는 헌법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등 전시물을 통한 소통을 도모한다. 도서실이 위치한 1층과 2층은 어린이 열람공간과 서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북측은 본관과 함께 전면의 계단식 분수마당을 감싸며 멀리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품는다.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면 북촌 일대와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1층은 본관과 연결된 도서관의 주출입홀과 북카페를 통해 아래 위 층이 연계될 뿐 아니라 서측과 남측의 후정이나 선큰마당, 북촌의 한옥 주거지와 대면하게 된다.

존중과 변화의 조화

헌법재판소는 본관 설계 당시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라는 무게감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외형의 옷을 입는 게 합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화와 비례를 중시하는 서양의 고전 양식으로 지은 육중한 석재건물이 안정적이고 엄중한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을 듯하다. 그 후 시대정신이 바뀌어 탈권위주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건물의 재해석도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를 처음 세울 때는 장벽을 두르고 권위를 강조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문을 열고 소통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다.

기본적으로는 본관의 질서를 쫓고 있지만, 별관의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 정형은 아니다. 동측 면은 전면가로에 대응한 사선 형태이고, 각 모서리를 최대로 열어놓고 벽면의 프레임 깊이에 변화를 주어 섬세한 한옥의 치마선을 표현한다. 기존 청사의 열주 형상 수직 패턴을 적용하면서도 전면의 계단식 분수와 함께 엄격한 대칭을 유지하고 있는 본관에 다소 변화를 가미한 배치와 구성으로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유구 보존, 전시 방안을 찾다

건물을 짓기 전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하다 켜켜이 쌓인 역사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중 능성위궁 별채 유구와 옛 학교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잖아도 협소한 부지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난관이 등장했지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시각의 전환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초가 된다. 불쑥 등장한 것 같지만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새것이나 오면 이전 것이 어떠했는지는 금세 잊어버리던 망각의 시대에서, 이제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가치를 찾는 시대다. 주초 몇 개와 적심들 그리고 기단석 일부 등이 발견됐는데, 문화재청에 자문해 이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싶었다. 한동안은 원형 보존의 원칙 아래 유구를 유리판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한옥 지붕의 보호각을 세우는 것으로 균일화돼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유구들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는 것으로서, 과편들로 발견된 흔적 그대로를 보는 것 이상의 시각적 감흥을 주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미디어와 시각적 메시지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공간 전시 영역에서 조금의 상상력을 추가하고 싶었다. 우선 남은 것을 통해 사라진 것을 추적해 보았다. 그것은 시대와 형식을 감안한 대략의 원형을 추정할 근거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사라진

③
유구
전시관



유구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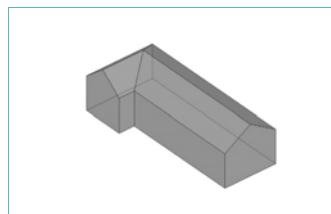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유구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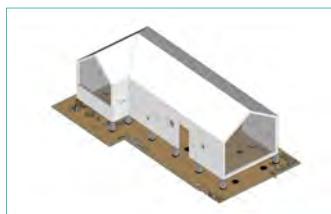
기록 구조 추정



기록 형태의 매스 구성



기단부 및 구조체 형성



외피 계획



주변과 연계

유구전시관 계획과정



①
법원
정면



상부구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전시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본 개념은 기단과 상부구조를 구분한 다음 기단석들을 이은 기단부는 관람자가 발을 디딜 수 있게 하고, 상부구조는 단일 매스의 외피 형태로 만들어 내외부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급적 실체에 대한 경험에 가깝게 하는 것이었다.

상부구조의 형태는 최대한 추상적으로 제시해 관람자로 하여금 상상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구조적으로는 기존 주초와 적십들의 원형을 보존 유지하고 사라진 주초 위치에 새로운 주초를 형성해서 그것들로 상부구조를 지지하게 했다. 구조물의 내벽에는 기둥 위치에 선형의 홈과 조명을 두어 한옥의 ‘간’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관람자의 시선에서 유구의 관찰이 쉽도록 측단부와 대청 쪽을 개방했다.

재료는 징크판을 사용했는데, 이는 북촌의 지역성을 감안해 기와색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서 선택했다. 다만 당초는 물성을 고려해 테라코타 판재를 선택했으나 현장 상황에 의해 변경되었다.

협소한 대지에 별관과 유구전시관이 공존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의외의 조합이 오히려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상생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새로운 소통의 가치를 품은 공간을 기대하며

본관이 들어선 지 30년 가까이 지난 2020년에 새로 모습을 드러낸 별관이 준공될 때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다가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뜻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아직도 그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워드 코로나 국면에서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게 될 듯하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땅에서, 그 흔적들을 품고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공간의 일부분으로서, 또 한번의 변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남다른 공유와 소통의 가치를 느끼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26

포럼 및 세미나

129

연구원 단신

138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염철호
수탁 과제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임유경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규철
	도농복합도시의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성은영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	심경미

수시과제

①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건축물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같은 소규모 주택, 피출소·어린이집·주민센터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이다. 2020년 기준 연면적 200m² 미만의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약 727만 5,000동 중 66.6%(약 484만 8,000동)로 3동 중 2동이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중·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낮은 품질과 취약한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과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축주의 직영공사 범위를 661m² 이하까지 허용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10%를 절감하기 위하여 일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영세한 무자격업체에 도급공사를 주는 것이 일반화된 점이 소규모 건축물 시장 왜곡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는 직영공사 범위를 200m² 이하로 축소하였으나, 불법 면허대여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200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시공, 품질관리의 미흡, 관련 주체의 역량 부족, 제도적 관리 대상 제외 등의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경쟁 기반의 악순환 구조'에서의 저렴한 대가로 인한 노동시간 장기화나 품질이 낮은 기술력과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여 소규모 건축시장을 '양질의 서비스 기반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렇게 조성된 건축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나 단속강화 같은 단기 처방식의 조치보다는 취약한 시장구조와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

질개선은 물론 한 걸음 나아가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업추진·연구수행 등 정책 및 연구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규철

수탁과제

①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2007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건축·도시 관련 사업 조정 및 자문응대,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 사업계획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계획이다.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지원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총 22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지원사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가 많아진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1년 지원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확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유경

② 근현대 건축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근현대 건축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여 근대 시기의 유산을 문화재로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근현대 건축유산을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20년 동안 시행되고 있고 건축자산 제도가 6년 정도 시행되었는데, 두 제도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근현대 건축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제도의 시행 대상과 목표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은 '문화재 등록 여부'를 제외하면 비교적 넓은 범위의 근현대 건축유산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자산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는 대상뿐만 아니라 관리제도의 목표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근현대 건축유산의 동일한 대상에 대해 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보존과 활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기관 특성에 따라 보존과 활용의 역할을 분담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제도의 동일한 대상인 '근현대 건축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현대 건축유산의 범위 및 제도의 운영 목표와 문화재 및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계 정립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대상과 관리 목표를 재검토하여 근현대 건축유산 제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론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 건축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건축자산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의 상호보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규철

news

③ 도농복합도시의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체계 구축 방안 연구

소득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행복한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면서 의료·체육·문화 등의 일상 및 여가활동도 집 주변에서 총족하게 되어 근린의 편의 및 복지시설 공급 수준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간을 통한 주민의 복지 제고를 위해 생활SOC복합화사업 및 부처별 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과 체육·문화·보육·복지 시설 공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위한 전국 일괄공모방식의 사업추진은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수준 격차, 지역 내 시설의 중복성, 지역 주민의 수요 등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지역 단위의 시설 공급 및 관리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정비 및 개발사업 단위의 시설계획으로는 현실과 미래 수요 반영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고밀지역인 도심지와 인구저밀지역인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저밀도로 인해 효율성 측면에서 배제된 도농복합 지역의 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이 안 되거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과다 공급으로 예산의 비효율과 운영비 부담이 가지 될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주체인 지자체가 수요 변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증대, 시설 노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의 공급 혹은 기존 시설의 재배치 등 지역별로 부담 가능한 서비스 공급정책을 자립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계획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내 공간복지 서비스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기반의 지역맞춤형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례 지역에 대한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주체 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성은영

④ 경관 계획·십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

2007년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5년과 2020년에 제1·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으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전면 개정 이후 약 6년 동안 경관심의 및 경관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경관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경관 관련 제도 및 행정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현재 「경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실제 경관현장에서 작동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관리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 경관 관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 행정 등 크게 세 부분의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경관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쟁점별 운영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필요사항을 도출하는 것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는 것 ▲셋째, 「경관법」 개선의 기본방향과 주요 쟁점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최근 제기된 경관 관련 쟁점사항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경관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경미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 및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수)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과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20년 시작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을 주제로 7월 12일부터 10월 15 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다. 에세이·포스터·동영상 등 3개 분야에서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134건이 응모하였으며, 10월 말 심사를 통해 총 8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탐구생활(동영상)’은 대단지 아파트로 인한 통행 불편 해결, 보행자 중심의 가로 조성, 역사건축물 경관 개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주거환경생태계의 전환, 건축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경제(에세이)’가, 우수상에는 ‘사운드스케이프로 그려나갈 대한민국(동영상)’이 각각 선정되었다.

시상식 이후 ‘건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축정책의 성장 과정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젠틀한 밀도 / 경관의 미래도시공간’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이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끝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토론회를 진행하여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news

2021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함께 10월 22일(금) 온라인 생중계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축도시 분야는 전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둘째 안전망 강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김애주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활동진 활동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문명과 회복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공간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도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시설별 대응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호정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두 발제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건축도시 분야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을 예측하는 등 더 나은 건축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을 스마트하게, ‘스마트건축’”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27일(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을 스마트하게, ‘스마트건축’”을 개최하였다.

먼저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축 산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스마트건축의 개념 정립 및 건축물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산업화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수행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스마트한 주거생활, 스마트하우징’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하우징 관련 R&D 연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강태웅 단국대학교 교수는 ‘스마트건축, 제조기반의 건축: 공업화, BIM, 목재패널라이징 그리고 그 결과’에서 스마트제조업 방식에 기반을 둔 공업화 주택의 개념 도입 및 사업화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노상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과 성과, 제조 산업의 변화를 ‘스마트 제조와 제조 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 조관우 국토교통부 사무관, 지강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건축 활성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산업 현황,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및 협력과 민간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학회 제2차 공동 학술 심포지엄 ‘건축자산 용어 사용과 개념, 지역의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10월 29일(금) 여수 EXPO컨벤션센터에서 ‘건축자산 용어 사용과 개념, 지역의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을 주제로 제2차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이에 따른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외에도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하였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영철 배재대학교 교수가 ‘전쟁·파괴·보존: 프랑스와 독일의 문화재 관리’, 이수정 국립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문화재적 관점에서 본 국내 건축자산 관련 용어와 개념의 제문제’, 정연상 국립안동대학교 교수가 ‘경북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현황 고찰’,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성과와 후속사업’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웅주 조선대학교 교수,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 2부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재와 건축자산,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지방도시로 간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6일(토) 공주 고마아지트에서 ‘지방도시로 간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주제로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 유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유휴공간 재생이나 지역자원 활용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에서 청년활동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살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가운데 지역에서 청년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가 차례로 나섰다.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최정혜 춘천일기 대표, 순창과 조치원에서 활동하는 장재영 빙랑싸롱 대표, 공주에서 가가책방을 운영 중인 서동민 가가북앤컬쳐 대표가 차례로 실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의 공간 조성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상현 공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실장, 권오상 퍼즐랩 대표가 참여해 ▲지역 활동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지역 원주민 등과의 관계 ▲지역살이 변수와 다양한 형태 등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생활과 마을재생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news



2021 한옥포럼 ‘한옥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후원하는 ‘2021 한옥포럼’이 지난 11월 12일(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옥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한옥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한옥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기획 과정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공공한옥 건축기획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장필구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정수초등학교 한옥 교실의 도전과 역할’을 소개하였다. 이어 김가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당준상 전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 관리과장, 김원천 참우리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장필구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 김가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한옥 공공건축물을 활성화와 정책 마련 등 보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2021 제4회 건축공간연구원-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공동학술세미나 ‘지역 건축자산의 제도적 활용방안 -남원, 수원, 제주의 사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근대도시건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 세미나가 지난 11월 18일(목) 서울 공공일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건축자산의 제도적 활용방안-남원, 수원, 제주의 사례’를 주제로, ‘2021년 건축자산 자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축자산 보전·활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되었다.

안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안 수립’을 통해 진흥구역 심층조사의 진행 결과와 근대 풍경 유지 방향 및 관리계획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김민철 (주)서울 소셜스탠다드 대표는 ‘남원시 건축자산(미도탕, 남경탕) 가치조사’를 주제로, 남원 미도탕·남경탕의 지역적 의미에 대한 심층 조사와 활용 계획 수립 방안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전진홍 바래(BARE) 소장은 ‘수원시 건축자산(舊國립축산과학원) 가치조사’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을 대상으로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 기준을 도출하고 보전·활용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연경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조정구 구가건축사사무소 소장,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례별 특성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CPTED 사업'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이 11월 25일(목)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2021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는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CPTED 사업'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인 '노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 기준 개선' 등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형진 서울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과 CPO가 '자치경찰 치안행정 협업 모델 제시', 현태환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 기준 개선 연구',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노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 등을 순서대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병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민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내실 있는 범죄예방 정책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제1차 라운드테이블 '도시·건축 아카이브 수집 방향과 실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제1차 라운드테이블이 12월 1일(수) 서울도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올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시, 아카이브, 추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수집을 키워드로 한 '도시·건축 아카이브 수집 방향과 실천'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수집 방향'을 다룬 주제발표 1부에서는 최원준 숭실대학교 교수가 '건축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를 포함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 박세훈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도시 분야 아카이빙의 범위, 전략, 과제'를,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조경 아카이브 기획의 쟁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 2부에서는 '수집 실천'을 중심으로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원종관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이 '도시 아카이브의 카탈로그·불충분한 문서의 숲을 해마다'를, 김태형 목천김정식문화재단 팀장이 '자료로 보는 한국건축가의 활동 내력'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각각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 도시 및 건축 등 수집 대상 자료의 기준,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다.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7일(화)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주제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 및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계획·사례를 발표하여 고령자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특성과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남기철 등 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비스연계주택 공급의 쟁점과 방향’을 통해 노인주택개조사업의 내실화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싱가포르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관련 정책적 노력과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전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맹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교수, 한귀영 한겨레신문사 사회정책센터 및 여론과데이터센터장 등 건축도시·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의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지원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021 AURI 아카데미 성과보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3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1 AURI 아카데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2021 AURI 아카데미는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성과 확산 및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기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31일(월)부터 11월 26일(금)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었다. 연구계획서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지원자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진을 멘토로 하여 매월 1~2회 연구수행을 지원받았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지원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지원자	연구주제
1 김희원	보행자 마스터플랜 사례 연구
2 김효정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한 아파트 단지의 특례적용 현황과 계획 특징에 관한 연구
3 김수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서울 도심부 경관 최적화
4 이하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활용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사업의 영향 분석
5 김유진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 연구
6 오지연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우울감을 표출하는 공원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
7 박예진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주민의 의식 분석과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8 최정인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
9 이란희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인식 현황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10 정혜린	직시하기, 불편문화유산을 덜 불편하게 보는 방법 –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내에 복원된 일제 건립 국가건축문화재를 중심으로



2021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AURI' 개최

12월 7일(화)

과제명	책임자	주제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손동필	도시설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	고영호	
지속가능 보행도시조성지원사업	한수경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정책 지원사업	조상규	스마트녹색
신기후체계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사업	이은석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김은희	건축연구
공공건축 지원사업	방재성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이규철	공간문화연구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신치후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심경미	지역재생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장민영	

12월 8일(수)

과제명	책임자	주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변은주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손동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김용국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김은희	스마트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조상규	도시건축
사업 개편방안 연구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이여경	건축제도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공공건축을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석환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장민영	지역·빈집
인구감소시대 노후 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한수경	재생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김민경	



건축공간연구원은 2021년 연구성과를 국내외 학계와 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 대중에게 공유하고자 온라인 오픈 세미나 방식으로 12월 7일(화)과 8일(수) 양일간 '2021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AURI'라는 주제 아래 올해 건축제도, 지역·빈집재생, 스마트도시·건축,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제로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10건과 건축·지역재생·도시설계·스마트녹색·공간문화 부문의 일반사업 11건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news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금) 서울 연남장에서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AURI 건축도시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담론의 장이다.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라는 주제 아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 부문의 노력을 공유하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도시에서 보행권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공간의 조성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변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걷기 좋은 도시 30년: 그 많은 운동, 연구, 정책, 사업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를 시작으로,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의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이 발표되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훈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보행도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거주가치를 위한 주거문화 정책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6일(목) 공공그라운드 001 스테이지에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공급방식 활성화’를 주제로, 더 나은 거주가치를 위한 주거문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가 ‘민간주도-공공지원의 대안적 주택의 사업 모델 및 공급/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김진욱 한솔아이키움 대표가 ‘돌봄특화형 공동주택의 가능성과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임강륜 로컬스티치 본부장은 ‘코리빙·코워킹 공간을 통한 거주실험과 과제’를 전하였으며, 끝으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공동대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무찬 간삼건축 상무,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현재와 미래’가 12월 17일(금) 서울도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개최되었다. 연구원 유튜브 채널 auri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2007년 「건축법」에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실태와 공동주택 적용 사례 및 확대 적용 가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별건축구역 운영 실태와 향후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오택준 운생동건축사사무소 소장이 ‘특별건축구역과 공동주택의 실험’을 통해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건축사사무소에지학 대표는 ‘특별건축구역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윤혁경 에이엔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사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조관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조성국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팀장, 김지엽 성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news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auri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목)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11회를 맞은 한옥공모전은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를 주제로 준공·계획·사진·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준공 부문에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을 신설하였다. 4개 부문에 311개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 부문 4점, 계획 부문 18점, 사진 부문 23점, 영상 부문 15점 등 모두 6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설계와 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준공 부문 대상은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인 ‘하동 한옥문화관’이 차지하였으며, 계획 부문 대상은 한옥 처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표현한 ‘상상루’에 수여되었다. 사진·영상 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입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사진 부문에서는 ‘소나기와 고택’이, 영상 부문에서는 ‘한옥으로’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해 준공 부문에 처음 신설된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에는 ‘서울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이 선정되었다.

2021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프로그램 실시

건축공간연구원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축 제도와 정책 변화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건축과 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문화,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정책·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대전·광주 등 10개 공공기관 관계자 207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의 ‘COVID-19 이후 도시와 건축’,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미래도시 건축에서 목조건축의 가능성’,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의 ‘公共建築: 共을 넓히는

公’, 정이삭 동양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조교수 및 에이코랩 대표의 ‘일상의 공공성’, 방재성 건축 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과제’, 이현우 (주)이집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학교건축사례를 통한 공공건축 설계 실무 공유’,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및 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파주시 공간환경전략 및 공공건축 고도화 계획’, 윤승현 인터커드 건축 사사무소 대표의 ‘건축사연, 마을과 사람들’, 박영일 건축사사무소 핸드 대표의 ‘공유와 소통 공간 구현하기 건축사례’, 이용주 이용주건축스튜디오 대표의 ‘공공건축의 새로운 방향’, 강정은 everyarchitects 대표의 ‘재생: 현 것을 고쳐야 만 재생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0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0-1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지역사회 통합 둘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4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4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6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6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7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8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2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1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9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3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17,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3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공개공지의 지속기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 창의적 입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5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13,000원

2019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19-1 포용적 균형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2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6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밸코니 활성화 방안 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2 북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3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2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2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4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3 고령자 건강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5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1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6 한국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5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2018~2019년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7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기능한 운영방안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6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 1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8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9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8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목적용 활성화 방안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9 건축물을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건축물을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2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출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2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9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매뉴얼 1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국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2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5 한국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1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1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3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 우리 사회가 바라본 건축서비스산업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건축을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3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6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2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축소 도시재생 모델 개발 3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4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3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7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3 상업적 펍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균린생성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5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4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7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8,000원	2018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2018-14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연구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6 2017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8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5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7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1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1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2 녹색도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지표 개발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6 유흥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제권(SIB) 도입방안 연구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8 소방서 조성 기준 및 계획 현황 연구 17,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3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7 국토경관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수요맞춤형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과 평가 2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3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4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 방안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8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0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기획 연구 2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을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5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1 한국 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5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1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6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2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2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6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7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3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8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4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2 공공건축 설계용역 밸류제도의 현황과 과제 12,000원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이종민, 김종범
비매품



거주자가 들려주는
한옥의 가치
이종민, 김해리, 유예슬
비매품



가치를 있는
건축자산 활용 02 주택
이민경, 권영란, 김민지
비매품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현태환, 박유나
비매품



보행자를 위한 설계
Before & After
오성훈, 김영지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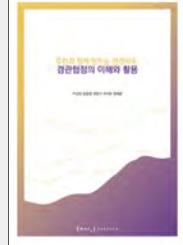
공공건축 가이드 0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
박석환, 이해원
비매품



좋은 공공건축 03
모두가 함께 만든 아인들의
두번째 집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윤주선, 장민영, 이화영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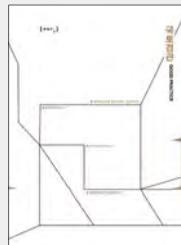
지역관리회사와 마을재생:
군산시 지역관리회사 사례
윤주선, 장민영, 김영하
비매품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관약속:
경관협정의 이해와 활용
이상민, 송윤정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9
이경재, 임유경
비매품



국토경관
GOOD PRACTICE 1
심경미, 이상민, 이경재, 송윤정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통합과 이슈 2020
이여경, 송혜진
비매품



경상북도 한옥현황 및 통계
이민경, 이종민, 방보람
비매품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안내서
이종민, 김종범
비매품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민경, 이종민, 권영란
비매품